

주간 통일정세

2015-06

Contents

I. 북한동향

1. 대남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3. 대내정치
4. 경제
5. 사회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III. 북한인권동향

1. 북한 내부 실상 및 대내외 동향
2. 북한인권
3. 탈북자
4. 이산가족
5. 납북자
6. 국군포로
7. 대북지원
8. 북한동향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남

가. 공식발언 및 성명과 담화

- 북한 "우리 비행훈련이 장난감 훈련이라고?"(2/4, 평양방송)
 - 북한 항공 및 반항공군 대변인은 4일 조선인민군 신문사 기자와의 문답에서 모형 비행기로 하는 북한의 도보비행훈련에 대해 남측이 "땅바닥에 지도를 그려놓고 장난감 전투기를 이용하여 훈련한다고 비방해 나섰다"면서 "이는 비행훈련에 대한 초보적인 상식도 없는 무지렁이들의 떠벌임"이라고 밝혔다고 평양방송이 4일 보도함.
 - 또한 대변인은 남측이 "도보비행훈련을 비방하는 것도 모자라 우리의 '최고준엄'까지 비방했다"고 항의하고 "군사에 문외한인 집권자가 통수권을 행사하니 아랫것들 모두가 제망신인 줄도 모르고 무지의 소리만 쉼쳐대는지 모른다"고 말했다고 방송은 전함.
- 북한 "진실로 대화 바라면 신뢰할 수 있는 조치해야"(2/4, 조선중앙통신)
 -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대변인은 4일 조선중앙통신과 인터뷰에서 남북대화가 열리지 못하는 것은 미국의 간섭과 한·미의 '야합' 때문이라며 "이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남북관계에서 근본적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함.
 - 이어 대변인은 "북남 사이에 풀어야 할 현실적인 문제들이 쌓여 있지만 실제로 남조선 당국이 미국을 배제하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라고 전하며 실천적 조치가 없는 대화제외는 "대화가 열리지 못하는 책임을 우리에게 넘겨씌우기 위한 서툰 기만극"이라고 주장함.
- 북한, '남북 비사' 공개 MB 회고록 강력 비난(2/5, 조선중앙통신)
 -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은 5일 담화에서 "민족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 역사의 시궁창에 처박힌 산송장 리명박 역도가 회고록을 통해 북남 비공개접촉과정을 왜곡하며 우리를 헐뜯는 추태를 부리었다"고 비난함.
 - 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검은 것도 희다고 철면피하게 우겨대는 이명박 역도와 같은 남조선의 무지막지한 자들과 앞으로 민족의 중대사를 논의할 수 있겠는지

심각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함.

- 또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회고록이 아니라 민족반역범죄를 반성하는 죄행록이나 쓰고 역사의 응당한 징벌을 받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며 "우리는 남조선에서 벌어지는 사태를 예리하게 주시해볼 것"이라고 경고함.

■ 북한 조평통, 박 대통령 발언 비난…“언행 바로해야”(2/6, 조선중앙통신)

-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6일 박근혜 대통령의 중앙통합방위회의 발언을 비난하고 "남조선 집권자가 우리와 대화를 할 의지가 있다면 언행을 바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조선중앙통신과의 문답에서 밝힘.
- 조평통은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은 남북관계 악화를 북한에 떠넘긴 것이라고 하며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대한 노골적인 도발이며 흑백을 전도하는 과립치한 망발"이라고 주장하고 이어 "미 제국주의에 적극 추종하여 우리에게 대한 도발의 도수를 높이고 있는 것도 바로 괴뢰패당"이라면서 북한은 남한이 이런 '망발'을 계속하면 참화를 면할 수 없다고 전함.

나. 주요 매체 대남 논평

■ 북한 "MB 회고록 '꼴불견'…거짓말투성이"(2/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4일 '못매맞은 정치무능야'라는 제목의 단평에서 "(이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쓴다는 것도 가관이지만 자기 치적을 광고하려고 염치없이 놀다가 동네북 신세가 된 것은 더욱 꼴불견"이라고 비난함.
- 신문은 이어 이 전 대통령이 회고록으로 '도처에서 못매를 맞고 있다'면서 이는 "책이 '4대강 사업의 중요한 역할'이니, '자원외교의 성과'니 하는 따위의 뻔뻔한 거짓말투성이이기 때문"이라고 전함.

■ 북한 "남한 이중적 자세가 관계개선 막아"(2/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4일 '북남관계개선을 저해하는 이중적 자세'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말과 행동이 다른 남조선 당국의 양면주의적 처사"로 남북간 '협상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고 주장함.
- 신문은 대화 의지는 말이 아닌 '실천 행동'에서 나타난다고 거듭 강조하며

"말로는 대화를 운운하고 돌아앉아서는 동족 대결을 일삼으면 북남 대화와 협상을 이룰 수 없다"고 전함.

- 또한 한미연합훈련 강행과 대북전단 살포 목인 등을 거론하며 "말로만 대화를 운운할 것이 아니라 반공화국 대결 소동의 전면 중지로 대화와 협상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성공적 진행을 적극 추동해야 한다"고 촉구함.

■ 북한 "전단살포는 최악의 도발...정부가 막아야"(2/6,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6일 '전쟁의 화근, 북남관계의 재앙거리'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반공화국 뼈라살포 행위는 북남관계 파국을 조장격화시키는 최악의 정치적 도발"이라고 주장함.
- 대북전단 살포가 '심리전의 한 형태인 사실상의 전쟁 행위'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고 "도발자들의 살포 망동이 우리 군대의 응당한 군사적 보복 대응을 불러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고 밝힘.
- 또 "망동을 계속 목인조장하는 무분별한 처사가 북남관계와 나아가 동북아시아 지역 정세에 어떤 파국적 재난을 몰아올 것인가를 논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것이 "전면전쟁의 불집을 터뜨릴 수 있다"고 신문은 밝힘.

다. 남북 당국 회담 및 정치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라. 대남 군사 관계

■ "한미군사훈련 일촉즉발 상황 초래할 수도"(2/3,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3일 "현재 조선인민군은 적대국의 군사적 도발에 대처하기 위한 훈련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면서 "3월 초부터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면 일촉즉발의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함.
- 신문은 또 2013년 북한 핵미사일 위기 등을 언급하며 "북침 전쟁연습이 조선반도 주변에서 강행돼 불측의 사태가 일어난다면 2015년 훈련에서 울려나온 경종은 말만으로 그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함.

- 北, 원산서 동해로 단거리 미사일 5발 발사(2/8, 연합뉴스)
 - 북한이 8일 오후 단거리 전술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5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8일 보도함.
 - 원산 일대에서 8일 오후 4시20분부터 5시10분까지 발사된 이 미사일은 동해 동북방 방향으로 200여km를 비행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미사일이 어떤 기종인지는 아직 정확히 분석되지 않았지만 북한이 지난해 8월 발사한 신형 전술미사일과 같은 기종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뉴스는 전함.

마. 남북 경제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바. 남북 사회 관계

- 특이사항 없음

- 北,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새해 첫달 행보가 심상치 않다(오산 공군기지 방문·2015년 업무보고 기자회견·세계경제연단 45차 연차 총회, '북핵은 남북관계 암덩어리' 등 발언)"며 이는 "어리석고 몽매한 반역의 길, 결코 수수방관할 수 없다"고 신랄히 비난(2.3, 중앙통신)
- 법무부 장관의 '보안법 개정 추진(새해 업무보고)'에 대해서도 "남조선 당국자들이 아무리 북남관계 개선에 대해 떠들어도 그것은 한갓 침발린 나발이며, 파썸독재통치 강화와 반역정권 연장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보안법 폐지' 주장(2.3, 중앙통신·노동신문)
- 우리 법무부의 국가보안법 개정 논의는 '남조선의 자주·민주·통일세력을 근원적으로 말살하고 북남 관계를 최악의 파국으로 몰아가려는 용납 못할 범죄적 망동'이라며 '보안법은 개정이 아니라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2.5, 중앙통신)
- '북남관계가 개선의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날을 따라 뒷걸음치고 있는 것은 미국의 반통일 정책 때문'이라며 '남당국은 미국의 침략적인 정체를 똑바로 보고 제정신을 차려 미국에 대한 환상을 털어버려야 한다'고 주장(2.5, 중앙통신·노동신문)
- 제15차 「범민련(조국통일범민족연합)」 공동의장단 회의, 2월 6일 南·北·해외사이 모사전송으로 '범민련의 올해 활동방향 토의 및 광복 70년 등 계기 민족공동행사 추진 등 보고' 진행 및 '공동결의문' 채택(2.6, 중앙통신·중앙방송)
- 남한 '채널A' 2월 5일 보도('6·25 당시 美 세균탄 사용' 北 주장에 대한 '세뇌교육으로 미국에 대한 적개심 키우고 있다')를 "배족행위, 식민지주구의 낚두리"라고 비난(2.6, 중앙통신)
- 해군 '잠수함사령부' 창설 축하의 미명 아래 美핵잠수함의 김해 해군기지 입항 및 각종 훈련들을 거론 '조국해방 70돌이 되는 올해에 남북관계 개선과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기 위해서 외세와 벌이는 모든 전쟁행동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재차 주장(2.7, 평양방송)
- 우리 공군의 대규모 종합전투훈련(2.2~13) 실시 관련 '새해벽두부터 괴뢰 호전광들이 벌이는 북침전쟁 연습소동으로 한반도 정세는 위험한 상태에 처하고 있다'고 비난(2.8, 중앙통신·중앙방송)
- 우리 '채널A' 방송사의 보도내용(2.5, 北 체제결속을 위해 세뇌교육으로 미국에 대한 적개심을 키우고 있다)을 거론하며 이것은 '미국 상전을 섬기면서 민족의 운명도 서슴없이 내맡기는 가련한 식민지주구, 매국역적들만이 할 수 있는 반민족적 범죄행위'라고 비난(2.8, 중앙통신·민주조선)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가. 공식발언과 제안

■ 북한 "시리아 정부-반군 협상 환영"(2/2, 조선중앙통신)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시리아 정부와 반군이 1월 말 러시아에서 협상한 사실을 언급하며 "우리는 시리아 정부와 인민이 단결된 힘으로 위기를 하루빨리 끝장내고 평화와 안정, 번영을 이룩하기를 바란다"고 밝힘.

- 대변인은 이번 협상에서 양측이 11개 항의 '모스크바 원칙'을 채택했다며 "협상 결과는 나라의 자주권과 영토 완정을 보장하고 현 위기를 대화를 통해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리아 정부와 인민의 의지를 보여줬다"고 평가함.
 - 이어 외무성 대변인은 시리아 사태가 "미국과 서방의 노골적인 내정간섭과 주권침해행위" 탓에 발생했다며 "시리아 문제가 외세의 간섭 없이 시리아 인민 자체의 힘으로 정치적으로,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것은 우리 공화국 정부의 시종일관한 입장"이라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함.
- 북한 김영남, 이집트 테러 규탄…"비열한 행위"(2/2,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최근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연계세력의 이집트 테러 공격에 대해 '비열한 행위'라고 규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일 보도함.
 - 통신은 김 상임위원장은 1일 압텔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에게 보낸 위로 전문에서 "이번 테러 사건을 이집트의 사회정치적 안정과 민족적 단합을 파괴하는 비열한 행위로 단호히 규탄한다"고 밝히며 "이집트의 북부 시나이 지역에서 감행된 테러 공격으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슬픈 소식에 접해 당신(이집트 대통령)과 이집트 인민과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문의 뜻을 표한다"고 전했다고 보도함.
 - 북한 국방위 "미국과 마주앉을 필요 없다"(2/4,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국방위원회가 4일 성명에서 "미국을 상대로 더는 마주앉을 필요도 없고 상종할 용의도 없다는 것을 미합중국의 오바마 행정부에 정식으로 통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고 보도함.
 - 국방위는 이어 미국은 "선(先) 변화가 있어야 대화가 있다는 잠꼬대 같은 소리를 세계 면전에서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고 전함.
 - 또한 성명은 미국의 대북제재 조치, 오바마 대통령의 '북한 붕괴' 발언, 한미연합훈련·연합사단 등을 비난하며 "극도로 포악무도해지는 미제의 대조선적대시 정책을 짓부시기 위한 우리 군대의 대응도 강도 높게 벌어질 것"이라고 밝혔다고 통신은 보도함.

- 북한, 유엔인권보고관 비난…“탈북자 증언 까밝힐 것”(2/4, 조선중앙통신)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4일 조선중앙통신과의 문답에서 지난 2일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미국 AP통신과 인터뷰에서 '북한 김정은 체제가 교체·제거돼야 정치범 석방이 가능할 것'이라고 한 취지의 발언에 대해 "우리 최고수뇌부의 존엄을 놓고 횡설수설해댄 망동"이라면서 "천벌을 받아 마땅한 무엄하기 그지없는 행위"라고 비난했다고 전함.
 - 외무성은 "미국이 써준 각본대로 신동혁과 같은 이른바 '증언자'들을 만들어서 여기저기 끌고 다니며 거짓말을 꾸며내 국제사회를 기만, 우롱하고 반공화국 인권결의 조작에 날뛰었다"며 그를 '미국의 하수인'이라 말하고 다루스만 보고관이 만났다는 수백 명 탈북자들의 명단을 당장 공개하라며 "그러면 우리는 그가 만들어낸 모든 험잡꾼 증언자들의 범죄적 정체를 낱낱이 까밝힐 것"이라고 밝혔다고 통신은 보도함.

나. 주요 매체 논평

- 북한 "미국은 한반도 평화의 파괴자"(2/2,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일 '미국은 왜 조선반도의 긴장격화를 바라는가'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조선 반도의 정세를 극도로 악화시키는 기본 장본인은 미국"이라고 주장함.
 - 신문은 "미국이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이 아닌 긴장 격화와 분열 지속을 바라고 있다"며 이는 주한미군 주둔을 합리화하고 동북아시아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수립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함.
 - 또한 미국이 한반도 주변 대국을 견제하기 위해 '조선위협설'을 구실로 대대적으로 무력을 증강하고 있다면서 "북남관계가 개선되면 미국은 '사드'를 남조선에 전진 배치할 구실을 잃게 된다"고 신문은 강조함.
- 북한, 미국 핵잠수함 남한 입항 비난…“전쟁 기도”(2/3,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3일 남한 언론을 인용해 미국 핵추진 잠수함 올림피아호의 진해군항 입항 소식을 전하며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남조선 당국을 추동해 북남관계 개선의 분위기를 살벌한 전쟁 분위기로 덮어버리려는 위협천만만

전쟁 기도의 발로"라고 주장함.

- 이어 "연초부터 이지스 구축함 머스틴호를 들이밀어 조선 동서해상에서 북침전쟁연습에 광분해온 미국은 연이어 핵잠수함까지 동원하며 우리 공화국에 대한 선제공격 기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보이고 있다"고 통신은 전함.

■ 북한 "미국 대결 선택한 이상 반미성전 벌일 것"(2/3,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3일 '제국주의자들에게 자비를 모르는 사상과 신념의 총대'라는 글에서 "미국이 우리와 대결을 선택한 이상 우리는 무자비한 반미성전을 벌일 것"이라고 전함.
- 신문은 최근 실시한 공·해군 합동훈련의 성과를 내세우며 "미제가 방대한 침략무력을 끌고 조선반도 부근 작전수역에 기여들기만 하면 적 항공모함과 함재기들은 물론 모든 목표가 부나비 신세를 몇치 못한다"고 경고함.
- 이어 "침략과 도발의 원흉인 미제가 우리의 존엄과 자주권, 생존권을 0.001mm라도 건드리면 역사가 일찌기 알지 못하는 가장 무서운 참변을 악의 총본산인 미국 본토에서 당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함.

■ "북한 국방위 성명 미국에 대한 최후 통고"(2/5,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5일 평양발 기사에서 "국방위원회 성명은 미국의 분별을 잃은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 초강경으로 대응해나갈 입장을 명백히 했다"며 이는 "오바마 행정부에 대한 '최후 통고' 성격을 띤다"고 주장함.
-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과 북한 공·해군 합동훈련 등이 2013년 '북미핵미사일위기' 당시 대결국면을 방불케 한다면서 "조선문제에 실책을 되풀이해온 백악관 주인에게 전면대결을 회피하기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전함.
- 또한 "오바마 행정부는 대화가 실현되지 못하는 책임을 조선에 전가하려고 하지만 공은 여전히 미국에 넘어가 있다"며 "교전 상대가 아무런 결단을 하지 않았는데 조선이 태도를 스스로 바꾸는 일은 없다"고 강조함.

■ 북한 "리퍼트 대사 발언은 히스테리적 망발"(2/5,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3일 한미의원외교협의회가 주최한 간담회에서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의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북한이 '핵·경제

병진정책 포기'와 '제재 고립의 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거세게 비난하며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책동이 히스테리적 말기 증상에 이르고 있다"고 5일 전함.

- 이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제재조치와 '북한 붕괴' 발언을 거론하며 "미국 대통령과 정계, 군부의 우두머리들이 나서서 악설을 퍼부어대고 군사적 압살 소동까지 벌여대는 대결 광기가 날이 갈수록 분별을 잃고 있다"고 통신은 비난함.

■ 북한, 박연미 증언 비난…"미국이 조종한 연극"(2/5, 통일신보)

- 통일신보는 5일 '박연미-전쟁도화선의 불씨인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박 씨의 증언을 1991년 이라크전쟁의 도화선이 된 한 쿠웨이트 여성의 유엔 증언과 비교하며 "오늘날 세계를 기만하는 광대극이 미국의 조종하에 또다시 벌어졌다"고 비난함.
- 이어 박 씨가 국제사회에서 행한 증언을 가리켜 "이 연극의 연장선에서 미국은 지난해 말 유엔무대에서 불법 부당한 대조선 인권결의라는 것을 조작했다"면서 "미국의 시간표대로라면 이제 남은 것은 박연미와 같은 인간 추물들을 불씨로 전쟁 도화선에 불을 다는 것 뿐"이라고 주장함.
- 또한 신문은 북한 체제를 부정하는 미국과 더이상 마주앉을 용의가 없고 미국이 원하는 어떤 전쟁에도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미국에 "이 단호한 결심과 의지를 똑바로 파악하고 정책결정을 바로 해야 한다"고 강조함.

다. 회담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라. 대미국

■ "성김, 제3국서 김계관과 비공개 회동 제안"(2/2,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2일(현지시간) 익명을 요구한 미국 내 소식통들의 말을 인용해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1월 28일 일본 도쿄(東京)에서 열린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에 참석하기에 앞서 뉴욕채널을 통해 김 제1부상과 제3국에서 회동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2일 보도함.

- 그러나 북한이 김 대표에게 평양으로 직접 들어오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바람에 대화가 무산된 것으로 뉴스는 전함.

■ 미국 국방정보국장 "북한 추가 핵실험 우려"(2/4, 미국의소리)

-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의 빈센트 스투어트 국장이 3일(현지시간) 합동참모본부의 윌리엄 메이빌 작전국장, 마크 찬들러 정보국장과 공동으로 작성한 미국 하원 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북한이 앞으로 핵실험을 실시할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4일 보도함.
- 이들은 지난해 11월 유엔 총회가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한 직후 북한 대표들이 추가 핵실험 가능성을 거론한 점에 주목하고 북한이 핵탄두를 탑재해 미국까지 발사할 수 있는 장거리미사일을 개발 중이며 기존 장거리미사일 'KN-08'의 작전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전함.
- 또한 이들은 북한을 "세계에서 탄도미사일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로 꼽았으며 북한의 사이버 공격 능력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고 전함.

■ 미 하원, 대북제재 강화법 발의...해킹 제재 포함(2/6, 연합뉴스)

-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이 5일(현지시간) 북한과 불법으로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 등으로 제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초당적으로 발의했다고 연합뉴스가 6일 보도함.
- 한 외교 소식통은 "'이란제재법'의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처럼 제3국 정부 등에 광범위하게 제재를 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기업이나 개인이 북한과 의도적으로 거래하는 것을 막고, 이를 위반할 경우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는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조항이 들어 있다"고 설명했다고 뉴스는 전함.

마. 대중국

- 환구시보, 북한학자 통일 주장 기고문 게재(2/4, 환구시보, 연합뉴스)

- 환구시보(環球時報)가 4일자 신문에 김예진(金藝珍) 북한 외무성 군축평화연구소 연구원이 쓴 '한반도와 동북아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처방'이란 제목의 기고문을 실었다고 연합뉴스가 4일 보도함.
- 김 연구원은 기고문에서 "북남(남북)이 모두 통일실현을 희망하지만 모두 스스로의 사상과 제도의 포기를 원치 않는 상황"이라면서 "상대방에게 자기의 것을 강요한다면 필연적으로 전쟁을 초래함으로써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엄중하게 위협할 것"이라고 전했다고 뉴스는 전함.
- 또한 기고문은 김정은 당 제1비서가 올해 초 발표한 신년사 내용을 소개하면서 이는 통일사상의 정확한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고 뉴스는 밝힘.

바. 대일본

- 조선총련 본부건물에 근저당권...“전매자금 제공 가능성”(2/3, 교도통신)
 - 경매로 부동산 회사에 팔렸다가 재매각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본부 건물과 토지에 거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됐다고 교도통신이 3일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조선총련 본부 건물과 토지에는 이를 최근에 사들인 야마가타(山形) 현의 부동산회사 '그린포리스트'를 채무자로 하는 용자 상한 50억 엔(약 468억 원)의 근저당권이 소유권 이전일인 지난 1월 28일 설정된 것이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됐으며 근저당권자는 조선총련 관련 시설인 도쿄도(東京都) 분쿄(文京)구의 조선출판회관을 최근까지 소유하고 있던 '하쿠산(白山)출판회관관리회'(이하 관리회)로 전함.
 - 조선총련은 이에 관해 "(관리회와 조선총련은) 관계없다. (용자는) 아는 바가 없다"고 관련성을 부인했으며 관리회 사무국 담당자는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조선총련과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고 통신은 전함.
- 북한 사회단체 "일본 과거청산 위한 조치 취하라"(2/4, 조선신보)
 - '조선일본군성노예 및 강제연행피해자문제 대책위원회' 계성훈 위원은 4일 조선신보와 인터뷰에서 일본이 과거사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함.

- 계 위원은 "작년 5월 '스톡홀름 합의'에 따라 북한은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고 문제를 해결하려 성의있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도 북한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함.
- 또한 "특히 시급히 해결돼야 할 인도적 문제는 강제연행 희생자 유골 문제와 원자탄 피해자들에 대한 의료지원 문제"라며 "일본 정부가 진상조사 및 피해 보상, 유골 안장, 의료 지원 등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조선신보는 전함.

사. 대러시아

- 특이사항 없음

아. 국제기구

- 북한, 유엔에 '인권결의 무효화 요구' 서한 보내(2/4, 조선중앙통신)
 - 리수용 북한 외무상은 유엔 사무총장과 유엔총회 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북한인권결의가 허위에 기초해 기만적으로 채택됐다는 것을 유엔성원국들에 알리고 이 결의를 무효화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4일 보도함.
 - 리 외무상은 또 유엔이 '인권소동의 난무장이 된 것'에 대한 사태수습, 유럽연합(EU)·일본 등 북한인권 결의를 발기한 국가들의 사죄를 촉구하며 "인권결의가 철회된다면 우리는 인권분야에서 대화와 협력을 진행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함.
 - 또한 신동혁의 증언은 수백 명의 증언 중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입장에 대해서는 "만일 수백명이라는 증언자의 명단을 내놓는다면 우리는 그들의 거짓말을 만천하에 드러낼 준비가 돼 있다"고 주장했다고 통신은 전함.

자. 기타 국가

■ 특이사항 없음

- 리수용(외무상), 주북 여러 나라(쿠바·시리아·스웨덴·독일·영국 등) 대사들과 담화(2.2, 중앙통신)
- 韓美의 '북핵문제 지적(북핵, 한반도와 東北亞정세 불안정 요인·핵포기 결단 촉구 등)'에 대해 "조선반도에서 핵문제가 해결되자면 미국과 남조선 호전광들의 핵공갈과 위협, 북침전쟁 위험부터 제거되어야 한다"고 '북핵문제 韓美 책임 전가 및 핵무기 강화입장 不變' 강조(2.3, 중앙통신·노동신문·중앙방송)
- 국제인권단체들과 국가들이 '북한의 美 CIA 고문만행을 유엔 인권이사회(3월) 안건상정 제안에 공감할 표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는 "미국이 대국의 강권과 전횡을 부리고 있지만 국제적 정의와 인류의 양심을 절대로 말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2.3, 중앙통신·민주조선)
- 베트남 공산당 창건 85주년 관련, 지난 기간 베트남의 '反帝투쟁· 자주적 사회건설' 지지 표명 및 '北-베트남의 친선관계 강화발전' 강조(2.3, 중앙통신·노동신문·중앙방송)
- 조선노동당, 2월 4일 탄자니아혁명당 전국 집행위 앞으로 黨창건 38돌 즈음 축전(2.4, 중앙통신)
- 北-베트남 외교관계 설정 65주년 기념집회 및 영화감상회, 2월 4일 서호원(대외문화연락위 부위원장) 등이 참가한 가운데 평양고려호텔에서 진행(2.4, 중앙통신)
- 김영남, 2월 3일 제24회 아프리카연합(AU) 총회에서 새 의장으로 임명된 짐바브웨 대통령에게 축전(2.4, 중앙통신·중앙방송)
- 北 「조국전선」 대변인 담화(2.6), 韓·美에서 "북한체제를 혈돋고 있다(변화 필요성·북한붕괴 등)"며 이는 "북체제 붕괴 망상에 사로잡힌 자들의 추태"라며 "우리(北) 존엄과 체제를 혈돋는 자들은 가장 참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2.6, 중앙통신·중앙방송)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 폴란드 주재 北 대사에게 '리근' 임명(2.7, 중앙통신·중앙방송)
- 美 고위관리들(국무부 정무담당 차관 등)의 對北 비핵화 발언 등에 대해 '남북관계 개선과 긴장완화의 흐름을 가로막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긴장상태를 격화시키려는 것이 美 樞방꾼들의 목적'이라고 지속 비난(2.7, 중앙통신)
- 조국통일연구원, '미국은 70년 동안 북남관계 개선과 통일을 가로막아온 장본인'이라며 미국의 만고 죄악을 폭로하기 위한 '고발장'을 발표하고 '미국이 계속 대조선 적대시정책에 매달리면서 북남관계 개선과 통일을 방해한다면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2.8, 중앙통신·중앙방송)

3. 대내정치

가. 김정은 동향

- 북한 김정은, 전투비행사들 집무실 불러 격려 (2/2,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당 제1비서가 2015년 첫 비행훈련으로 표창 휴가를 받은 전투비행사들을 만나 격려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일 보도함.
 - 통신은 2일 "김 제1위원장이 새해 첫 비행전투훈련 명령을 훌륭히 수행하고 표창휴가를 갔던 전투비행사들을 기대하기에 앞서 당중앙위원회 청사(집무실)로 불러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밝힘.
 - 사진 촬영에는 17명의 전투비행사가 참여했으며 김 제1위원장은 비행사들에게 강도 높은 비행훈련을 주문하며 "원수들이 움쩍하기만하면 단숨에 날아가 침략의 본거지들을 사정을 보지 말고 불마당질해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통신은 전함.
- 김정은, 각국 지도자에 연하장…러시아 먼저 호명(2/3,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3일 김정은 당 제1비서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등 주요 친선국 수반들에게 2015년 연하장과 축전을 보냈다고 보도함.
 - 신문은 각 국가 수반의 실명 호명 없이 직책들만 나열했으며 '러시아 연방 대통령',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인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쿠바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등의 순으로 보도함.
- 북한 김정은, 평양화장품공장 시찰…김여정 수행(2/5,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당 제1비서가 평양화장품공장을 "우리 인민들이 외국산보다 은하수 화장품을 먼저 찾게 하고 나아가서는 은하수 화장품이 세계 시장에도 소문이 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5일 보도함.
 - 김정은 당 제1비서는 또 화장품 생산의 과학화·현대화 등을 강조하며 올해를 '화장품공업 발전의 분수령'이 되도록 하라고 주문했다고 전함.
 - 김 당 제1비서의 시찰은 안정수 당 경공업부장, 한광상 재정경리부장, 리재일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김여정·신만균 부부장 등이 수행했다고 통신은 전함.
- 북한, 새 함대함미사일 개발…김정은 시험발사 참관(2/7,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 조선중앙통신은 7일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의 뜻을 받들고 한 사람같이 떨쳐나선 국방과학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 군수 노동계급은 신형 반함선

로켓을 최첨단수준에서 개발하는 성과를 이룩했다"고 밝힘.

- 통신은 해군 제155부대가 진철수 동해함대장의 지휘 아래 시험발사를 진행했으며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이를 참관했다고 보도함.
- 노동신문은 7일 북한 군함에서 발사된 이 로켓이 가상의 적함선을 정확하게 탐색, 식별해 명중시켜 "설계된 전술기술적 제원에 도달하였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됐다"고 자평했지만 사거리 등 구체적인 제원은 공개하지 않음.
- 김 제1위원장은 이 '장거리 타격'을 할 수 있는 신형 로켓 개발 수준에 만족을 표시하고 "현대전의 그 어떤 작전과 전투에서도 주도권을 확고히 틀어쥘 수 있는 고도로 정밀화, 지능화된 전술유도무기들을 더 많이 만들어 내라"고 주문함.

■ 북한 김정은, 해군 산하 함선수리공장 시찰(2/8,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해군부대 산하 함선수리 공장을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8일 보도함.
- 통신은 "김 제1위원장이 인민군 해군 제597부대 관하 10월3일 공장을 현지지도하고 현대화 과업을 제시했다"고 밝히면서, "자그마한 함선수리 조합이 그 어떤 전투함선들도 능히 수리할 수 있는 공장으로 장성 강화됐다"며 이 공장이 군 함선을 수리·보수하는 공장임을 확인함.
- 김 제1위원장은 "최근 현대적으로 변모된 공장·기업소와 비교하면 공장의 설비와 생산·기술공정은 물론 생산·생활문화가 많이 뒤떨어졌다"고 지적하고 '지식경제시대에 걸맞은 현대화'를 주문함.
- 또 공업용 폐수가 바다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정화시설도 갖출 것을 지시하면서 이같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당에서 지원할 것을 약속함.
- 김 제1위원장의 8일 시찰은 인민무력부 부부장인 윤동현 상장(별 세계), 홍영철 당 부부장이 수행함.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 "류경 북한 보위부 부부장 일가족 함께 총살 당해"(2/3, 자유아시아방송)

-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3일 마키노 요시히로 미국 존스홉킨스대

연구원의 말을 인용해 류 전 부부장이 재일동포 출신 며느리를 제외한 일가족과 함께 처형됐다고 보도함.

- 마키노 연구원은 북한이 2011년 2월 초 류 전 부부장의 재일동포 출신 며느리를 강제로 이혼시킨 뒤 류 전 부부장 일가족을 그의 평양 자택에서 총살했다고 전함.

■ "김정은, 측근 2명 경질설"(2/5, NHK)

- 스키장 건설을 담당했던 마원춘 국방위 설계국장이 "김 위원장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최근 경질됐으며, 1월 교체된 변인선 북한군 총참모부 작전국장도 김정은 당 제1비서와 다른 의견을 말해 숙청된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한국 정부 관계자가 제시했다고 NHK가 5일 보도함.
- 또한 NHK는 한국 정부 관계자가 김정은 당 제1비서의 동생 김여정이 왼손 약지에 반지를 끼고 굵이 낮은 신발을 신은 것으로 미루어 결혼해서 임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으며 김정은의 고모인 김경희는 치료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일각에서 나도는 사망설을 부인했다고 전함.

다. 공식 행사

- 특이사항 없음

라. 주요 기관 행위

- 특이사항 없음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 북한, 경제발전 호언... "위성사진 어둡다고 속단말라"(2/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3일 '눈앞에 있다'라는 제목의 정론에서 "조선은 지금 확고부동하게 행복의 궤도에 들어섰다"고 보도함.

- 신문은 "제일 힘들었던 먹는 문제에서부터 빠르게 변(변화)이 나고 설레는 징조가 보이고 있다"며 "농사에서 저마다 혁신이 일어나 농민들의 쌀가마니가 커지기 시작했고 어제 날의 '빈 봉투' 농장이 희한한 온실도시로 변했다"고 역설함.
 - 또한 "번쩍거리지는 않아도 안정되고 정치적 오염은 찾아볼 수 없는 깨끗한 사회, 살림은 아직 풍족하지 못해도 미풍이 샘솟는 조국"이라고 자평하며 "제국주의 국가와 대치한 상황에서 이런 생활을 누린 것 자체가 행복"이라고 신문은 강조함
- 북한 "조국을 위해 무엇을 바쳤나"…애국헌신 독려(2/6,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6일 1면 사설에서 "조국을 위해 나는 무엇을 바쳤는가, 지금 우리의 모든 공민들은 이 엄숙한 물음 앞에 서 있다"며 주민들이 이 물음에 떳떳이 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함.
 - 신문은 "만일 우리 세대가 시대와 역사 앞에 지닌 공민적 의무를 다하지 못해 강성국가 건설의 시간표가 드티게(흔들리게) 된다면 우리의 후대들이 그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가사(家事)보다 국사(國事)를 귀중히 여기는 애국헌신의 기풍을 높이 발휘해나가야 한다"며 "개인의 안일과 이익만을 추구하는 불건전한 사상 요소들이 절대로 싹트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경고함.
 - 북한, '정규군 창설일' 홍보 특집…내부 결속 다지기(2/7,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7일 2~4면 대부분을 김일성 주석이 실제 인민군을 창설한 날인 1948년 2월8일을 기리거나 이날을 맞아 열린 전국 각지의 행사 소식을 전하는 '2월8일' 특집으로 꾸밈.
 - 기사는 특히 "피비린내나는 전쟁터마다 연승을 떨쳤다는 미제의 장군들을 차례로 과멸시킨 영웅들이 바로 소박한 나무 책상에서 백두영장의 전법과 전술을 배운 노동자, 농민의 아들, 딸"이었다면서 인민의 충성심 발휘를 독려함.
 - 4면에서는 인민군이 6·25전쟁 중이던 1952년 미군 직승기(헬기)와 조종사 등을 나포한 사건을 자세히 소개하며 전쟁의 승리는 "위대한 영장의 뛰어난 군사적 지략과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직한 군인들"에 의해 결정된다고 선전함.
 - 이어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은 7일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열린 정규적 혁명무력 창설 67주년 기념 인민무력부 보고회에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김정은)의

명령 지시에는 오직 '알았습니다'라는 한마디 대답밖에 모르는 결사관철의 기풍이 대오 안에 차넘치게 해야한다"며 김 제1위원장에 대한 절대 복종을 주문함.

- 황병서는 7일 "최고사령관동지께서 4월 25일과 함께 2월 8일을 뜻깊은 명절로 기념하도록 한 것은 위대한 대원수님의 업적을 빛내려는 의지의 발현"이라고 밝히 2월 8일 정규군 창설일 기념이 김 제1위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임을 확인함.

■ 북한, '정규군 창설일' 대대적 선전...반미자주 다짐(2/8,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8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해군 함선수리공장 시찰 소식을 실은 1면을 제외한 나머지 면을 모두 '정규군 창설일' 관련 기사로 도배함.
- 신문은 3면 '위대한 김일성 동지의 정규적 혁명무력 건설 업적은 조국청사에 영원히 빛날 것이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1948년 정규군 창설은 미국 등 '제국주의'에 대항해 자주국가를 건설할 수 있는 기반이 됐다고 선전함.
- 사설은 "갓 해방된 조선에서 불과 2년 남짓한 기간에 정규적 혁명무력을 건설한 것은 세상을 놀라게 한 기적"이었다며 어려운 상황에서 정규군을 창설한 김일성 주석의 '업적'은 다른 국가의 본보기가 됐다고 주장함.

- 김정은 黨 제1비서, 2월 2일 전국 학생소년들의 '광복의 천리길' 답사행군 참가자들에게 선물 전달 (2.2, 중앙통신)
- 당과 국가의 책임일꾼들, 2월 2일 강원도 원산구두공장 참관(2.2, 중앙통신)
- 김정일 생일(광명성절, 2.16)을 맞아 김일성사회주의 도·시·군 청년동맹 위원장들, 백두산 밀영 고향집으로의 답사행군 시작(2.2, 중앙방송)
- 김정은 黨 제1비서, 2월 2일 베트남 창건 85주년을 즈음하여 '응웬 푸 쯡' 베트남 공산당 총비서에게 축전(2.2, 중앙통신·중앙방송)

4. 경제

가. 정책 동향

- 북한 "핵자위력 덕에 경제발전"...개혁조치는 침묵(2/3,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3일 '눈앞에 있다' 제목의 정론에서 최근 주민들의 먹는 문제가 크게 개선됐다고 선전하며 "핵 강국의 전승에 이어 병진의 튼튼한 쌍마에 올라 새로운 조선속도의 주로에 들어섰다"고 밝힘.
 - 2013년 제3차 핵실험에 이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채택한 경제·핵무력 병진정책을 경제 발전의 주된 요인 중 하나로 꼽은 것임.

- 북한 신문, 포전담당제 성과 소개..."정보당 1t 증산"(2/6,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6일 '은을 낸 포전담당책임제'라는 제목의 글에서 평안북도 용천군 양서협동농장의 작년 곡물 수확량이 2013년보다 정보당 평균 1t 이상 늘었다며 포전담당제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음.
 - 양서협동농장 분조의 규모가 평균 4~5명이라며 "분조의 규모를 이렇게 정하니 농업 근로자들 모두가 자기가 담당할 포전의 실태를 지난 시기보다 잘 알게 됐다"고 강조하고 "포전담당책임제 실시야말로 땅의 주인, 알곡 생산의 주인이라는 자각을 더욱 높여주는 우리식의 경영관리방법"이라고 신문은 덧붙여 전함.

나. 주요 후속 조치

- 북한, 자금세탁 방지 '국가조정위원회' 설립(2/3, 조선신보, 연합뉴스)
 - 2014년 자금세탁방지 금융대책기구(FATF)에 가입한 북한이 국제규범을 준수하기 위한 내부 관리기구인 국가조정위원회를 설립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3일 보도함.
 - 김천균 북한 중앙은행 총재는 3일 조선신보와의 인터뷰에서 "국가조정위원회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지원방지 사업을 지도하는 기관"이라며 "우리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지원방지 체계는 중앙은행 금융감독국과 인민보안부 금융정보국을 주축으로 사법검찰기관들과 인민보안부 등 기관들이 긴밀히 협력하는

체계"라고 설명함.

- 이어 "최근에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지원행위에 국제규범에 맞는 형벌을 가할 수 있도록 형법을 수정·보충하는 조치도 취했다"고 말했다고 전함.

■ 북한, 금융시스템에 새로운 변화 도입 나서(2/3, 조선신보,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북한의 김천균 조선중앙은행 총재가 3일 조선신보와 인터뷰에서 "현재 나라의 경제건설에서 제기되는 자금수요를 국내의 자금을 원활하게 회전시키는 방법으로 충족시켜 나가는데 주력하고 있다"며 "그 일환으로 새로운 금융상품의 개발, 인민생활 영역에서 카드 이용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함.

■ 북한, 16년만에 발명법 대폭 개정…인재발굴 총력(2/4,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4일 "조선에서 최근 과학기술 발전의 새로운 전환을 위해 발명법을 현실적 요구에 맞게 수정보충했다"고 전함.
- 법 개정의 취지에 대해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발명을 장려하고 발명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정책을 더 잘 집행해 나갈 수 있는 튼튼한 법적 담보를 마련하는 데 있다"고 설명하며 개정 시기와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통신은 전함.

다. 경제 상황

■ "북한 주민 하루 섭취열량, 50년전과 같은 수준"(2/3, 미국의소리)

- 북한 주민의 하루 섭취 열량이 50년 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인문사회잡지 내셔널지오그래픽을 인용해 3일 보도함.
- VOA는 내셔널지오그래픽이 작년 말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자료를 토대로 세계 22개국의 식단 변화를 분석한 결과 2011년 북한 주민의 하루 섭취 열량은 1961년(1천878kcal)과 비슷한 수준인 2천103kcal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하며 이는 FAO의 일일 권장량인 2천500kcal보다 적고 세계 평균인 2천870kcal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전함.

- "북한, 올해 곡물 10만7천t 부족 전망"(2/4,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4일 FAO가 3일 발표한 '북한의 곡물 수요·공급 전망 보고서'에서 북한의 2014~2015 양곡연도(작년 11월~올해 10월) 곡물 수요량을 548만9천t으로 추산하고 북한이 자체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곡물을 508만2천t으로 추산하여 40만7천t의 곡물을 수입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보도함.
 - 그러나 같은 기간 북한의 곡물 수입 예상치는 30만t에 불과해 10만7천t의 곡물이 부족할 것으로 FAO는 전망하였으며 이는 전년 동기의 곡물 부족분 4만t보다 6만7천t 많은 규모인 것으로 밝힘.
 - 또한 FAO는 북한의 지난해 작황이 정체되는 양상을 보였으며 북한이 올해도 고질적인 식량난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했다고 뉴스는 전함.

- "北 지난해 곡물생산 '고난의 행군' 이후 최고치"(2/6, 연합뉴스)
 - 유엔 세계식량계획(WFP)과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014년 쌀·옥수수·콩 등 북한의 곡물 생산량은 총 497만5천t(정곡 기준)으로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이후 최근 20년간 가장 많았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연합뉴스가 6일 보도함.
 - 그러나 수입량과 국제사회 지원이 줄어들어 2008년부터 7년 연속 최소한의 국민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수준보다 식량이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남.

라. 대외 경제관계

- "작년 중국 방문 북한 주민 수 10% 감소"(2/3, 미국의소리)
 - '중국 방문 외국인 통계자료'에서 2014년 한 해 중국을 방문한 북한 주민 수가 전년보다 2만여명 줄어든 18만 4천500명으로 집계됐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중국 국가여유국을 인용해 3일 보도함.
 - 이 통계는 정식 절차를 밟아 중국을 방문한 북한 주민 수를 집계한 것으로 방문 목적별로 살펴보면 취업을 위한 방문이 8만9천여명으로 전년대 비슷한 절반을 차지했고 회의·사업차 방문자는 3만 4천명, 관광 목적은 1천500여명으로 전년보다 각각 60%, 50% 가까이 줄었다. 남성 방문자 수는 15만 명으로

여성(3만명)을 크게 웃돌았다고 전함.

- "북한-러시아, 민간 경제 지원 위한 기업협의회 발족"(2/5, 미국의소리)
 - 블라디미르 스트라슈코 러시아 상공회의소 부소장은 4일 "북한과 민간 경제협력을 위한 기업협의회가 발족했다"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5일 보도함.
 - 협의회는 러시아 기업이 북한에서 사업 협력 기업을 찾는 데 도움을 주고 무역 등 분야에서 구체적인 사업 아이템을 발굴해주는 역할과 각종 박람회 개최, 회의 주선 등의 업무도 맡게 된다고 방송은 전함.

- 북한, 대중 무연탄 수출 8년만에 감소(2/6, 연합뉴스)
 - 6일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에 따르면 2014년 북한이 중국에 수출한 무연탄 규모는 11억3천218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이는 2013년의 13억7천371만 달러보다 17.6% 감소한 금액으로 북한의 연간 대중(對中) 무연탄 수출액이 감소한 것은 지난 2006년 이후 8년만에 처음이라고 전함.
 - 무게로 환산한 북한의 작년 대중 무연탄 수출 규모는 1천543만으로, 2013년(1천649만)보다 6.4% 줄었고 무게를 기준으로 한 북한의 대중 무연탄 수출량이 감소한 것도 2008년 이후 6년 만인 것으로 뉴스는 전함.

- 유엔 식량농업기구, 올해 427만 달러 대북지원(2/6, 자유아시아방송)
 -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올해 3건의 시설지원사업, 5건의 기술협력 사업을 북한에서 진행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각각 225만 달러, 202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한 것을 밝혔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6일 보도함.

- 미국 구호단체 '피드 더 칠드런' 작년 대북지원 시작(2/6, 미국의소리)
 - 미국의 구호단체 '피드 더 칠드런'의 신규 사업을 총괄하는 코리 고든은 지난 4일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 주최 토론회에서 "지난해 북한 고아들에게 컨테이너 4대 분량인 57만5천명 분의 식사를 제공했다"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6일 보도함.

- 고든은 "앞으로 식량 외에 구충제와 비타민A도 북한에 지원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의료 및 농업 지원 등으로 대북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향후 단체가 북한에 상주사무소를 둘 계획이라며 "북한에 제시한 약정서에 지원품의 분배 감시를 위한 사무소 명시를 명시했다"고 방송은 전함.

■ 작년 북미 교역액 4배 증가...대부분 민간 구호품(27, 미국의소리)

- 미국과 북한의 지난해 교역 규모가 2천400만 달러로 전년보다 4배가량 늘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미국 상무부를 인용해 7일 전함.
- 이는 모두 미국의 대북 수출액으로 2012년의 1천200만 달러, 2013년의 660만 달러와 비교해 3년새 최고 수준이며, 미국의 대북 수입액은 전혀 없었다고 뉴스는 전함.
- 그러나 대북 수출액의 95.8%인 2천300만 달러는 미국 민간단체가 구호나 자선 목적으로 제공한 품목으로 조사됐으며, 나머지 수출품은 방사선 의료기기 16만3천 달러, 수술용품 8만7천 달러, 수술 의료기기 3만 달러, 실험실 연구장비 2만9천 달러로, 이 역시 대북 지원용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됨.
- 또 닭과 오리 등 가금류 수출액은 5만1천 달러로 2013년의 20% 수준에도 못 미쳤으며, 그 외 2013년에 없었던 신발류가 8천 달러 어치 수출됐고 플라스틱 제품의 경우 6천 달러를 기록해 2013년의 3분의 1에 불과함.

- 대외경제성 국장 리순학, '우리나라(北)에는 투자자들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법률적 환경이 갖추어져 있다'며 '공화국 정부는 외국인들이 투자하는 것을 환영하고 있다'고 선전(2.2, 중앙통신)
- 김정일 생일(2.16) 즈음 박동호(농업과학원 수의학연구소 연구사)에게 '원사칭호' 수여 등 지식인들에게 국가학위학직 수여식, 2월 3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2.3, 중앙통신)
- 황해남도에서 올해 농사에 필요한 '물 확보사업(18,900여개 저수지 등 확장 보수 및 건설·3,000여개 우물 파기 등)' 주력(2.3, 중앙방송)
- 김정은 저작 발표(2.6) 1주년 즈음 지난 1년간 농업부문 일꾼들의 농업생산 성과(세포지구 대규모 축산기지 조성 등) 선전 및 '김정은의 사상을 구현하여 올해 농사 풍작'을 독려(2.6, 중앙통신·노동신문)
- 국가과학원 미생물학연구소에서 개발한 '미생물흡착제를 이용한 공업폐수정화기술이 큰 실리(낮은 농도의 중금속이온 정화로 환경오염 방지 등)를 나타내고 있다'고 선전(2.6, 중앙통신)
- 중앙버섯연구소, 쌀겨를 대신하는 '버섯기질 영양첨가제' 개발(2.7, 중앙통신)

5. 사회

가. 공식 발언 및 주요 조치

- 특이사항 없음

나. 시장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다. 국경통제 및 탈북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라. 각종 단속 및 검열

- 특이사항 없음

마. 사회 동향

- 북한, '여자축구 우승' 감동 이어가기...소설도 등장 (2/2,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2일 입수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월간지 '조국' 2월 호 '새 책 소개' 코너에서 북한 금성청년출판사가 출간한 중편소설 '축구소녀'를 소개했다고 전함.
 - 소설 '축구소녀'는 '송경이'라는 이름의 소녀가 혹독한 훈련을 거쳐 북한의 여자 축구선수로 자라나는 이야기를 그린 소설로 잡지는 "날로 높아지는 체육 열기에 발맞춰 아이들에게 축구에 대한 호기심과 함께 축구 지식도 안겨주는 중편소설 '축구소녀'는 조국(북한)의 학생소년들 속에서 널리 애독되고 있다"고 설명함.

- 북한, '2014 최우수선수' 1·2위 여자축구 선정(2/2, 우리민족끼리)
 - 우리민족끼리는 2일 '2014년 공화국의 10대 최우수선수' 명단을 발표하고 첫 번째 선수로 간판 여자축구 스타 라은심을 뽑고 2위는 여자축구 대표팀의 간판 골잡이 허은별을 선정했다고 전함.

- 북한, 여성 노동자 성형수술 성공담 대대적 선전(1/24, 평양타임스; 2/3,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3일 북한 '평양타임스' 1월 24일 자가 대서특필한 "화상을 당한 젊은 여성이 8년의 수술 끝에 미모를 되찾다." 기사를 인용하여 2006년 9월 평안북도 대관군의 한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얼굴이 심하게 훼손된 여성 노동자 림송미(28)가 평양 조선적십자종합병원에서 8년 동안 치료를 받으며 과거의 얼굴을 회복했다는 이야기를 보도함.
 - 평양타임스는 처음으로 림송미가 한창 수술을 받는 중이던 4년 전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을 나란히 배치한 사진도 실음.

- 김진경 평양과기대 총장 "평양에서 지메일 가능"(2/5, 연합뉴스)
 - 5일 김진경(80) 평양과기대 총장이 4일(현지시간)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 주최로 워싱턴DC에서 열린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하고 나서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평양에서)이메일을 보내고 받는 일이 모두 가능하다"고 말했다고 전함.
 - 평양과기대 운영 여건과 관련해 "교직원의 과반수가 미국 시민이고 한두 명의 예외를 빼면 기독교인이지만 안전하다"며 북한 당국이 "우리(평양과기대)를 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그들을 돕는다고 생각한다"며 "서로 믿는 일은 정치나 어떤 형태의 전쟁으로 얻을 수 없다"고 말했다고 뉴스는 전함.

- 전국 학생소년들의 <광복의 천리길> 답사행군(1.22, 출발), 2월 3일 종료 및 최룡해(黨 비서)·전용남(청년동맹 위원장/보고) 등 참가한 가운데 포평(양강도 김형직군) 도착모임 진행(2.3, 중앙통신)
- 김정일 생일 즈음 '백두산상 체육경기대회 개막식, 2월 4일 최룡해(黨비서) 등이 참가한 가운데 평양 청춘거리 농구경기관에서 진행(2.4, 중앙통신·중앙방송)
- 北, '호당당의사들이 의료봉사활동을 적극화하고 있다'고 선전(2.4, 중앙통신)
- '조선 정규무력' 창설('48.2.8)에 즈음하여 공화국영웅과의 상봉모임과 「직총」 중앙노동자 예술선전대 공연, 2월 5일 현상주(직총 중앙위원장) 등이 참가한 가운데 중앙노동자회관에서 진행(2.5, 중앙통신·중앙방송)

© 북한연구센터 제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 북핵문제 협의 (02/04, 연합뉴스)
 - 한국과 중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우다 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는 4일 오후 베이징(北京)에서 양자 회담을 열어 6자회담 재개 방안 및 북한 비핵화 방안, 북한의 도발방지 문제 등을 논의하였음.
 - 이번 회담은 미국이 제3국에서의 북미대화 개최를 제의한 상태에서 북한이 대화 장소를 평양으로 고집해 북미 대화가 불발된 상황에서 열린 것으로 한중 양국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이 같은 태도에 대해 평가하고 비핵화 대화에 대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짐.
 - 주중대사관 측은 "양측이 북한과 주변국간 관계 및 금년도 전망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고 밝혀 북미관계, 북러관계, 북일관계 등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의견 교환이 있었음을 시사하였음.

나. 미·북 관계

- 북한, 미국 핵잠수함 남한 입항 비난... "전쟁 기도" (02/02, 연합뉴스)
 - 북한은 2일 미국 핵추진 잠수함이 최근 진해 군항에 들어온 데 대해 남북관계 개선을 방해하려는 '전쟁 기도'라고 비난함.
 -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남한 언론을 인용해 미국 핵추진 잠수함 올림피아호의 진해 군항 입항 소식을 전하며 "연초부터 이지스 구축함 머스틴호를 들이밀어 조선 동서해상에서 북침전쟁연습에 광분해온 미국은 연이어 핵잠수함까지 동원하며 우리 공화국에 대한 선제공격 기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 보이고 있다"고 비난하였음.
 - 한편, 올림피아호는 우리 해군의 초청에 따라 한미 군사교류 증진을 목적으로 지난달 30일 진해군항에 입항했으며 이달 5~7일 한미 연합훈련에도 참가할

예정임.

- "성김, 제3국서 김계관과 비공개 회동 제안" (02/03, 연합뉴스)
 - 미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최근 북한 측에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과 회동하는 방안을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짐.
 - 이에 북한은 제3국이 아닌 평양으로 들어와 대화를 갖자는 입장을 고수하였는데, 김 대표는 현지점에서 미국을 대표하는 사절이 평양을 방문하는 모양새가 좋지 못한데다 평양이 탐색적 대화의 장소로 적절치 못하고 미국의 협상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점을 우려해 난색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짐.
 - 이와 관련,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김 성(성 김)이 이번 아시아 방문 기간 우리와 만날 의향을 표시한 데 대해 평양에 오라고 초청까지 했다"며 "그러나 미국은 그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마치고 우리의 불성실한 태도 때문에 대화와 접촉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듯이 여론을 오도하면서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하였음.

- 북한, 성김 평양 방문 고집... "폭넓은 대화 의도" (02/03, 연합뉴스)
 - 미국은 지난달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신년사가 공개된 이후 성 김 특별대표의 베이징 방문 도중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과 접촉하고 싶다는 의사를 북한 측에 전달했으나, 북한은 제3국이 아니라 김 특별대표가 평양을 방문해줄 것을 고집했고 미국은 이를 거부했음.
 - 이에 대해 미국 워싱턴 외교소식통은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과거 북한이 대화 의지가 있을 때는 제네바는 물론 뉴욕에도 외교 당국자를 보냈다"며 북한의 대화 의지를 의심하였음.
 - 그러나 북한이 굳이 성 김 대표를 평양에 초청한 것은 제3국에서 북미 대화가 열릴 경우 김 대표의 '굽'에 맞는 인사를 파견할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해 고위급 인사들을 두루 접촉시켜 북미간 현안들을 논의함으로써, 경색된 북미관계의 돌파구를 열려는 시도였다는 정반대의 해석도 나오고 있음.

- 북한 국방위 "미국과 마주앉을 필요 없다" (02/04, 연합뉴스)
 - 북한 최고권력기관인 국방위원회는 4일 성명에서 "미국을 상대로 더는 마주앉을 필요도 없고 상충할 용의도 없다는 것을 미합중국의 오바마 행정부에 정식으로

통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북한은 이번 성명 발표가 '위임에 따른 것'이라고 밝힌 점으로 미뤄 이 성명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보임.
- 성명은 미국의 대북제재 조치, 오바마 대통령의 '북한 붕괴' 발언, 한미연합훈련·연합사단 등을 비난하며 "극도로 포악무도해지는 미제의 대조선적대시 정책을 짓부시기 위한 우리 군대의 대응도 강도 높게 벌어질 것"이라고 강조하였음.

■ 북한 "미국과 대화 거부"...무력시위 카드 '만지작' (02/04, 연합뉴스)

- 북한 최고권력기관인 국방위원회가 4일 미국과 '대화 거부' 입장을 천명하고 무력 시위 쪽으로 방향등을 전환한 것으로 보임.
- 이와 관련, 빈센트 스투어트 미국 국방정보국(DIA) 국장도 3일(현지시간) 하원 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을 우려하였음.
- 한편, 북한의 이러한 강경 대응은 최근 전말이 공개된 북미대화의 무산이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중국·러시아와 함께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합동 군사훈련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관측도 있음.

■ 러셀 美차관보 "북한 변화, 꼭 정권교체일 필요없다" (02/05, 연합뉴스)

-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4일(현지시간) 워싱턴DC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변화가 꼭 정권교체여야 할 필요는 없다"며 "미얀마처럼 평화로운 과정을 거쳐 변화할 수 있다"고 밝힘.
- 러셀 차관보는 "미얀마의 군부독재는 스스로를 개혁하고 개방을 결정했으며 그 결과로 국제사회로부터 경제적 지원과 개발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며 특히 "이 같은 미얀마 경제의 전환과 생활의 변화, 국제협력과 지원은 혁명의 대가로 따라온 게 아니라 평화적 과정을 거쳐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함.
- 러셀 차관보는 "우리가 북한에 요구하는 것은 북한이 2005년 서명한 9·19 공동성명으로 돌아오라는 것"이라며 "이 같은 혜택을 논의하기 위한 대전제는 9·19 공동성명의 첫 문장, 즉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이행하느냐에 달렸다"며 "그러나 아직 북한이 비핵화할 용의가 있다는 충분한 증거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함.

- 성김 "대북기조 변함없어...제재강화 속 진지한 대화 모색" (02/05, 연합뉴스)
 - 미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4일(현지시간)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공동 주최로 워싱턴DC CSIS 회의실에서 열린 '한국의 통일과 미국' 심포지엄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면서도 진정성 있는 대화를 모색한다는 현행 대북정책 기조에 변화가 없다고 말하였음.
 - 그는 "우리는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나갈 것이며, 특히 소니사에 대한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강한 대북제재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와 동시에 우리는 6자회담의 다른 5개 당사국과 함께 믿을 만하고 진지한 비핵화 협상의 재개를 위한 기회를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또한, "이런 대북접근 방식은 6자회담의 프로세스와 같은 것"이라면서 "남북대화를 재개하려는 한국 정부의 노력 역시 이 같은 우리의 공통의 노력을 지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 카터 "북한 탄도미사일 공격 대비 미 본토MD 늘릴 것" (02/05, 연합뉴스)
 - 애쉬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 지명자는 4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원회(위원장 존 매케인) 주최로 열린 인준 청문회에서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로 미국 본토를 위협할 가능성에 대비해 본토 방어에 필요한 MD(미사일 방어) 체계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힘.
 - 카터 지명자는 북한 미사일과 대량파괴무기(WMD) 능력과 관련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배치된 미군과 동맹·우방에 대한 심각한 직접적 위협"이라며 "아직 장거리 발사는 검증되지 않았지만, 북한의 이 같은 능력은 미국 본토에 직접적 위협"이라고 주장함.
 - 이와 관련, 미국은 현재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기지에 지상발사 요격 미사일 30기를 배치하고 있으며 2017년까지 10억 달러를 들여 14기를 추가로 배치할 계획임.

- 리퍼트 美대사 "北에 계속 다가갈 협상참여 독려할 것" (02/05, 연합뉴스)

-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는 5일 "우리는 계속해서 북한에 다가가 이들이 완전하고 되돌릴 수 없고 검증가능한 비핵화의 평화적 달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진정성 있고 믿을 수 있는 협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말하였음.
- 리퍼트 대사는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서울 조선포털에서 개최한 제38회 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에 참석해 "한국과 미국은 대북정책에 있어 완전히 일치하고 있다. 서울과 다른 파트너들과 협력해 우리가 북한 지도층에 보여준 것은 외교적인 길은 열려 있다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힘.
- 그는 또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우리는 대가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북한은 핵무기를 추구하면서 이들이 바라는 번영과 안보를 추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 북한 "리퍼트 대사 발언은 히스테리적 망발" (02/05, 연합뉴스)

- 북한은 5일 핵무기를 포기하고 국제사회로 나올 것을 촉구한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의 발언을 '망발'이라고 비난함.
- 리퍼트 대사는 지난 3일 한미의원외교협의회가 주최한 간담회에서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북한이 '핵·경제 병진정책 포기'와 '제재 고립의 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하였음.
- 이에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리퍼트 대사의 발언을 거세게 비난하며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책동이 히스테리적 말기 증상에 이르고 있다"고 주장하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제재조치와 '북한 붕괴' 발언을 거론, "미국 대통령과 정계, 군부의 우두머리들이 나서서 악설을 퍼부어대고 군사적 압살 소동까지 벌여대는 대결 광기가 날이 갈수록 분별을 잃고 있다"고 비난하였음.

■ "북한 국방위 성명 미국에 대한 최후 통고" (02/05, 연합뉴스)

-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5일 전날 북한 국방위원회 성명을 '최후 통고'로 규정하며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촉구함.
- 조선신보는 이날 평양발 기사에서 "국방위원회 성명은 미국의 분별을 잃은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 초강경으로 대응해나갈 입장을 명백히 했다"며 이는 "오바마 행정부에 대한 '최후 통고' 성격을 띤다"고 주장하였음.
- 이와 관련, 미국은 일상적인 한미 훈련을 핵실험 가능성과 부적절하게 연결하는

북한의 성명이 '암묵적인 위협'이라며 제의를 거부했으며, 남한 정부도 한미연합 훈련과 핵실험은 연계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

- 미 전문가 "북한 해커부대 선양에…중국 지원 의혹" (02/06, 연합뉴스)
 - 데니스 헬핀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 연구원은 5일(현지시간) 소니 픽처스 해킹사건과 관련해 중국이 북한을 지원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였음.
 -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전문위원 출신인 헬핀 연구원은 이날 보수전문지인 '워클리 스탠더드'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 해커부대 '121부대'의 비밀 사무소가 북한에서 멀지 않은 중국 선양(瀋陽) 칠보산 호텔 내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 또한 헬핀 연구원은 "외국 정부의 주요 비밀공작이 중국 영토 내에서 중국 당국 모르게 수행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중국이 북한의 사이버 전쟁 활동을 인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원하고 있을 것이란 의문이 제기된다"며 "특히 중국의 컴퓨터 전문가들이 소니 해킹에 연루된 북한 해커들에게 훈련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 미 하원, 대북제재 강화법 발의…해킹 제재 포함 (02/06, 연합뉴스)
 - 미국 하원은 5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을 초당적으로 발의하였음.
 -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이 발의한 이 법안은 북한과 불법으로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 등으로 제재 범위를 확대하며 아울러 사이버 해킹에 대해서도 제재를 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됨.
 - 로이스 위원장은 앞서 지난해 비슷한 내용의 대북 제재 강화 법안(H.R. 1771)을 발의해 하원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으나 상원에서 심의되지 않아 자동으로 폐기되었으나, 이번에는 미국 상원에서도 조만간 이와 유사한 내용의 대북 제재 법안이 발의될 것으로 알려짐.

- 북한 단체 "'체제불안' 주장은 대결광신자의 잠꼬대" (02/06, 연합뉴스)
 -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조국전선) 중앙위원회는 6일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체제를 부정하고 있다며 이를 '도발적 망동'이라고 비난함.

- 조국전선 중앙위원회는 이날 대변인 담화에서 "미국과 한국의 도발적 대결정책은 남북 간 수습할 수 없는 돌발적인 상황을 불러올 수 있는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하며, 미국과 남측이 '체제불안', '북한붕괴'를 강조하고 있다고 주장함.
 - 이어 북한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북한 붕괴' 발언을 언급하며 오바마 대통령을 '미친개'라고 맹비난하였고, 극심한 사회갈등을 겪는 미국과 한국이 붕괴를 말하는 것은 '세기적인 희비극'이라며 "미국과 남조선 당국은 헛바닥을 함부로 놀려대는 것이 어떤 파국적인 후과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함.
- 작년 북미 교역액 4배 증가…대부분 민간 구호품 (02/07, 연합뉴스)
- 미국과 북한의 지난해 교역 규모가 2천400만 달러로 전년보다 4배가량 늘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미국 상무부를 인용해 7일 전함.
 - 그러나 대북 수출액의 95.8%인 2천300만 달러는 미국 민간단체가 구호나 자선 목적으로 제공한 품목으로 조사되었고, 나머지 수출품은 방사선 의료기기 16만3천 달러, 수술용품 8만7천 달러, 수술 의료기기 3만 달러, 실험실 연구장비 2만9천 달러로, 이 역시 대북 지원용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음.
 - 한편, 미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 및 자체 수출통제규정(EAR)에 따라 사치품과 무기, 핵·미사일 관련 물품, 생화학 무기 등은 대북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음.
- 오바마, 북핵 불용·사이버테러 응징 재천명 (02/07, 연합뉴스)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새로운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미국의 외교·안보 구상을 반영한 새 '국가안보전략'을 공개하며,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에서 미국의 단독 군사개입이 아닌 국제사회의 다자 틀 및 동맹과의 협력 틀을 활용하는 이른바 '오바마 독트린'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한반도 비핵화, 아시아 재균형 정책, 중국·러시아 대책, 테러 응징 등의 세부적인 구상을 밝혔음.
 - 오바마 대통령은 먼저 북핵을 겨냥, "무책임한 국가나 테러리스트가 핵무기와 핵물질을 사용하게 되는 것만큼 미국의 안보와 복지에 중대한 위협을 미치는 것은 없다"면서 "핵무기가 없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추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 이는 미 정부가 한반도 비핵화 원칙과 더불어 북한의 핵개발을 절대 용인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북한에 거듭 보내는 것으로, 미국은 현재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대북제재를 계속 강화하는 동시에 북한이 비핵화에 관한 진정성 있는 대화의 장으로 나오면 기꺼이 대화에 응하겠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음.

다. 중·북 관계

- "작년 중국 방문 북한 주민 수 10% 감소" (02/03, 연합뉴스)
 - 중국을 방문한 북한 주민 수가 작년 한 해 감소세를 보였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중국 국가여유국을 인용해 3일 보도하였음.
 - 중국 국가여유국은 2일 발표한 '중국 방문 외국인 통계자료'에서 작년 한 해 중국을 방문한 북한 주민 수가 전년보다 2만 여명 줄어든 18만 4천500명으로 집계되었고, 중국 방문 북한 주민 수는 2010년까지 10만~12만 명 수준을 맴돌다 2011년 15만 명으로 급증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3년 20만 명을 넘으며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힘.
 - 덧붙여, 방문 목적별로 살펴보면 취업을 위한 방문이 8만9천여명으로 전년과 비슷한 절반을 차지하였고, 회의·사업차 방문자는 3만4천명, 관광 목적은 1천500여명으로 전년보다 각각 60%, 50% 가까이 줄었음.
- 환구시보, 북한학자 통일 주장 기고문 게재 (02/04, 연합뉴스)
 -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人民日報)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는 4일자 신문에 김예진(金藝珍) 북한 외무성 군축평화연구소 연구원이 쓴 '한반도와 동북아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처방'이란 제목의 기고문을 실었음.
 - 김 연구원은 기고문에서 "북남(남북)이 모두 통일실현을 희망하지만 모두 스스로의 사상과 제도의 포기를 원치 않는 상황"이라면서 "상대방에게 자기의 것을 강요한다면 필연적으로 전쟁을 초래함으로써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엄중하게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하며 기고문 말미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올해 초 발표한 신년사 내용을 소개하면서 이는 통일사상의 정확한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평가하였음.

- 중국 관영 매체가 북한의 남북통일 논리를 그대로 담은 관변 학자의 기고문을 직접 실은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이것이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북한의 주장에도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는 중국 당국의 의중이 내심 반영된 것 아니겠느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음.
- 중국 "유엔 안보리 북한인권 논의 반대" (02/05, 연합뉴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의장국인 중국이 안보리의 북한 인권문제 논의에 반대하며 논의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5일 보도함.
 - 올해 2월 안보리 의장국인 중국의 류제이(劉結一) 유엔 주재 대사는 지난 3일 의장 자격으로 연 기자회견에서 "이달 중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밝히며 "인권문제는 안보리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며 유엔에는 인권문제를 다룰 다른 기구들이 있다"고 설명함.
 - 한편, 중국은 작년 12월 22일 안보리가 북한 인권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채택할 때도 러시아와 함께 반대 의사 표시를 했으며, 당시 북한 인권문제의 안보리 정식 안건 채택안은 찬성 11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가결됨.
- "핵문제 진전없으면 김정은 방중 성사 안될 것" (02/06, 연합뉴스)
 - 리카이성(李開盛) 상하이(上海) 사회과학원 국제관계연구소 연구원은 6일 관영 환구시보(環球時報) 영문판인 글로벌타임스에 기고한 글을 통해 "중국 입장에서 김정은이 '데뷔 무대'를 어디로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요한 것은 그의 핵 문제에 대한 의도와 북중 관계에 대한 태도"라고 언급함.
 - 리 연구원은 김정은이 북중 관계를 과거의 패턴으로 유지할 것으로 생각하겠지만 중국은 북한의 요구에 끌려가지 않고 있으며 이런 경향은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의 취임 이후 더욱 두드러진다고 설명하였음.
 - 이는 김정은이 중국을 먼저 찾지 않고 러시아를 첫 외국 방문지로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복잡한 중국의 입장을 반영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 "북한, 김정은 시대 들어 경제상황 호전" (02/08, 연합뉴스)
 - 중국 외교부 주관으로 발행되는 외교학술지 '세계지식(世界知識)'은 최신희의 '북한의 최근 경제개선을 어떻게 볼까'라는 글에서 "북한의 농업교역시장은

활기차고, 다양한 자국산 일용품이 계속 제작돼 나오고 있다"며 분석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학술지는 "(국제제재를 받는 북한의) 외환, 외부원조, 대외무역, 외자 등이 증가한 동향은 포착되지 않는다"며 이런 상황은 내부의 새로운 동력에 따른 것으로 봐야 한다고 언급하였는데, 이는 김정은 체제가 도입한 내각 주도형 경제정책, 일선 협동농장에 도입한 '포전담당제', 김 제1위원장이 지난해 5월30일(5·30조치, 생산·분배 독립 재산제 확대를 골자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발표한 경제정책들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해석임.
- 이 학술지는 그러나 최소한 북한이 경제발전에 우선순위를 둘 경우 핵문제에서 융통성을 발휘하거나 양보할 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한반도 핵문제의 중요한 이익 당사자인 중국 정부는 북한의 경제개선 현황과 대외 경제협력을 필요로 하는 상황 등을 전략적 시각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함.

■ 중국, 북한 자가용 관광 확대 추진 (02/08, 연합뉴스)

- 8일 관영 통신사인 중국신문사에 따르면 북한과 국경을 맞댄 중국 지린(吉林)성 정부는 올해 북한 당국과 협의해 지린성 창바이(長白)현-북한 양강도 삼지연군-백두산 동파(東坡) 코스를 연결하는 자가용 관광코스를 개통할 계획으로 알려짐.
- 현재 백두산은 동서남북의 주요 관광로 4곳 가운데 동쪽이 북한 영토이며 중국은 최근 백두산의 자국 지역에 스키장, 골프장 등을 갖춘 대형 리조트를 개장하는 등 관광 개발에 주력하고 있음.
- 이 사업이 최종 성사되면 2011년 6월 개통한 지린성 훈춘(琿春)시-북한 나선시 코스에 이어 중국 내 두 번째 자가용 북한관광코스가 되는데, 나선시 자가용 관광은 중국 국경부터 주행거리가 총 70여km에 불과하지만, 도중에 차량을 세워 북한 마을을 보고 주민과 접촉할 수 있어 중국인 관광객에게 인기가 높음.

라. 일·북 관계

■ 북한 사회단체 "일본 과거청산 위한 조치 취하라" (02/04, 연합뉴스)

- 최근 일본의 거듭된 역사 왜곡 시도가 논란을 일으키는 가운데 북한 사회단체인

- '조선일본군성노예 및 강제연행피해자문제 대책위원회'의 계성훈 위원은 4일 일본에 과거사 청산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였음.
- 계성훈 위원은 "작년 5월 '스톡홀름 합의'에 따라 북한은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고 문제를 해결하려 성의 있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도 북한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함.
 - 이와 관련, 특히 시급히 해결돼야 할 인도적 문제는 강제연행 희생자 유골 문제와 원자탄 피해자들에 대한 의료지원 문제라고 강조하였고, 대책위 차원에서 올해 조선인 징용자의 강제노동 및 집단학살 사건에 대한 전국적인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원자탄 피해자 2세들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도 펼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마. 러·북 관계

- 김정은, 각국 지도자에 연하장...러시아 먼저 호명 (02/04, 연합뉴스)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등 주요 친선국 수반들에게 2015년 연하장과 축전을 보냈다고 보도함.
 - 북한은 중국보다 러시아를 먼저 호명하였는데, 이는 부쩍 소원해진 북중 관계와 반면 협력을 확대 강화하고 있는 북러 관계의 실상을 반영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바임.
 - 앞서 김정은 제1위원장은 2012년 말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으로부터 신년 연하장을 받고 답장을 하지 않았는데, 이는 제3차 핵실험 이후 유엔 제재에 적극 동참한 데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음.
- "북한-러시아, 민간 경험 지원 위한 기업협의회 발족" (02/05, 연합뉴스)
 - 블라디미르 스트라슈코 러시아 상공회의소 부소장은 4일 "북한과 민간 경제협력을 위한 기업협의회가 발족했다"고 밝히며 "협의회 발족으로 양국 경제협력이 새 단계로 도약하게 됐으며 양국 교역과 경제 관계가 획기적으로 더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함.
 - 협의회는 러시아 기업이 북한에서 사업 협력 기업을 찾는 데 도움을 주고 무역 등 분야에서 구체적인 사업 아이템을 발굴해주는 역할을 할 것이며, 각종 박람회

개최, 회의 주선 등의 업무도 맡게 될 것이라고 전함.

- 한편, 스트라슈코 부소장은 지난 21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북-러 협력사업 관련 회의에서 러시아와 북한 기업인들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창설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음.

■ "김정은 5월 방러 때 극동 지역 찾을 수도" (02/06, 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오는 5월 러시아의 제2차 세계대전 승전 7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는 길에 러시아 극동 지역을 찾을 수도 있다고 극동 하바롭스크주 주지사가 6일(현지시간) 밝힘.
- 인테르팍스 통신에 따르면 바체슬라프 슈포르트 하바롭스크주 주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정은의 방문 가능성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아직은 모르지만 그들(북한 대표단)이 얼마든지 이곳으로 올 수 있다"면서 김정은 제1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함께 극동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고 답하였음.
- 이는 러시아와 북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푸틴 대통령과 김 제1위원장이 모스크바 승전 기념행사 참석과는 별도로 극동 지역에서 정상회담을 할 수도 있다는 설명으로, 러시아 대통령 공보실은 지난달 말 연합뉴스의 질의에 답하면서 김 제1위원장이 5월 승전 기념행사 참석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음.

바. 기타

■ 북한, 유엔에 '인권결의 무효화 요구' 서한 보내 (02/04, 연합뉴스)

- 북한은 탈북자 신동혁이 '거짓 증언'을 시인한 것과 관련,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을 무효화해줄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유엔에 보냄.
- 리수용 북한 외무상은 유엔 사무총장과 유엔총회 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북한인권 결의가 허위에 기초해 기만적으로 채택됐다는 것을 유엔성원국들에 알리고 이 결의를 무효화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4일 전했다.
- 리 외무상은 또 유엔이 '인권소동의 난무장이 된 것'에 대한 사태수습, 유럽연합(EU)·일본 등 북한인권 결의를 발기한 국가들의 사죄를 촉구하며 "인권결의가 철회된다면 우리는 인권분야에서 대화와 협력을 진행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함.

- 북한, 유엔인권보고관 비난…“탈북자 증언 까밝힐 것” (02/05, 연합뉴스)
 - 북한은 4일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북한 정권교체 발언에 대해 '최고준엄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난하고 탈북자의 증언을 모두 검증하겠다는 뜻을 밝힘.
 -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과의 문답에서 다루스만 보고관의 발언에 대해 "우리 최고수뇌부의 준엄을 놓고 횡설수설해댄 망동"이라면서 "천벌을 받아 마땅한 무엄하기 그지없는 행위"라고 비난하며 다루스만 보고관이 만났다는 수백 명 탈북자들의 명단을 당장 공개하라며 "그러면 우리는 그가 만들어낸 모든 험잡꾼 증언자들의 범죄적 정체를 낱알이 까밝힐 것"이라고 밝힘.
 - 한편, 다루스만 보고관은 지난 2일 미국 AP통신과 인터뷰에서 '북한 김정은 체제가 교체·제거돼야 정치범 석방이 가능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음.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윤병세-케리, 금주말 독일서 회담…한미 연쇄협의 (02/04, 연합뉴스)
 -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은 뮌헨안보회의가 열리는 오는 7일이나 8일 현지에서 양자 회담을 하기로 하고 최종 일정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짐.
 - 이번 회담은 지난달 28~29일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정무담당 차관의 방한에 이어 이뤄지는 것으로, 양국은 올해 첫 한미외교장관 회담인 이번 협의에서 최근 북한 정세를 평가하고 대응 방안을 조율할 예정임.
 - 특히 북한이 남북대화 제의에 응답하지 않은데 이어 국방위 성명 등을 통해 북미대화 거부 방침을 밝힌 데 따른 한반도 정세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예상됨.
- 오바마, 박 대통령 연내 방미 초청…시진핑·아베도 (02/07, 연합뉴스)
 -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새 국가안보전략을 설명하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연내 박근혜 대통령을 워싱턴DC 백악관으로 초청할 것이라 밝힘.

- 라이스 보좌관은 "오늘 이 자리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방미를 요청했다는 점을 발표하게 돼 기쁘다"고 밝히며, 이어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과 인도네시아의 조코 위도도(일명 조코위) 대통령을 포함해 다른 아시아 지도자들도 연내 백악관으로 초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함.
- 이와 관련해 뮌헨안보회의 참석 차 독일을 방문 중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7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양자회담을 하면서 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 일정과 형식 등을 협의할 예정이며, 박 대통령의 방미 시기는 올해 하반기로 방문 형식은 공식방문(Official Visit) 또는 공식실무방문(Official Working Visit) 등이 될 것으로 보임.

■ 미 국무 부장관 "한반도 미사일방어망 사드 포함 가능성" (02/08, 연합뉴스)

- 7일(현지시간)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토니 블링큰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한·중·일 3개국 방문에 앞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가능성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제차 언급함.
- 그는 '사드 한국 배치에 대한 중국 반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사드를 포함할 가능성이 있는(including possibly THAAD) 한반도의 미사일 방어는 이 지역 내 불안정의 최대 근원인 북한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것"이라고 답함.
- 이는 한반도에서의 미사일 방어(MD) 체계가 중국이 아닌 북한을 겨냥한 것이라는 데 방점이 있는 답변이지만, 미사일 방어망에 사드가 포함될 가능성을 여전히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도 해석됨.

■ 한미, 차대통령 연내 방미 합의... "대북 협력 가속" (02/08, 연합뉴스)

- 뮌헨안보회의 참석차 독일을 방문 중인 윤병세 외교장관은 7일(현지시간)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회담을 하고 북핵문제 공조 방안과 박근혜 대통령의 연내 미국 방문 계획을 논의함.
- 양국은 회담에서 북핵·북한 문제, 동북아 역내 문제와 글로벌 도전 등을 대응하는 데 양국간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도 긴밀히 이뤄지고 있다면서 올해도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 정책 조율과 협력을 지속 강화하기로 함.

- 이와 관련, 양국은 성공적인 방미가 되도록 하기 위해 박 대통령의 방미 시기, 형식 및 의제 등 구체사항에 대해서 외교채널 등을 통해 보다 심도 있게 협의해 나가기로 함.

■ 한미 원자력협상 사실상 타결...연구·개발 자율 확대 (02/08, 연합뉴스)

- 한미 양국이 이른바 농축과 재처리 문제와 관련, 현재 협정 골격을 유지하되 일부 연구·개발은 우리나라가 자율적으로 진행하는 내용으로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을 사실상 타결한 것으로 8일 알려졌다.
- 이에 따라 한국은 앞으로 핵확산 우려가 없는 일부 사용후 핵연료에 대한 연구·개발을 자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전해졌으나, 재처리에 대한 포괄적 사전 동의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전체적으로 미국의 비확산 정책도 유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 정부는 이번 협상의 3대 목표인 사용 후 핵연료 관리, 원전 연료의 안정적 공급, 원전수출 증진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새 협정문에 어떻게 담을지에 대해 미국과 사실상 합의하고 마지막 조율을 하고 있다고 복수의 정부 소식통이 밝혔다.

■ 블링큰 미국무부 장관 방한...9일 한미 협의 (02/08, 연합뉴스)

- 한·중·일 3국 순방차 우리나라를 방문한 블링큰 부장관은 9일 오전 외교부 청사에서 조태용 외교부 1차관과 만나 북한·북핵 문제와 지역 정세, 국제 현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 이번 고위급 면담에서 한미 양국은 최근 북한 정세를 평가하고 북한 비핵화 협상 재개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블링큰 부장관은 이날 인천공항 도착 뒤 기자들과 만나 "한미 양국의 파트너십은 한반도에 대한 공통 이해로 시작했으나 지역과 세계로 그 범위가 확대됐다"면서 "한국측 카운터파트와 만나 양국 관계를 더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블링큰 부장관은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 등도 만날 예정이며 국방부 등 다른 부처 고위 인사와도 면담할 예정이며, 또 10일에는 한미 민간교류 강조를 위해 한국 대학생 및 교환학생 프로그램 경험자들과 만나는 시간도 가질 것으로 전해짐.

나. 한·중 관계

- **한중 국방부 핫라인 설치...美·日에 이어 3번째 (02/04, 연합뉴스)**
 -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창완취안(常萬全) 중국 국방부장이 4일 서울에서 열린 국방장관 회담에서 국방부 간 '핫라인(직통전화)' 조기설치에 합의한 것은 양국 군사관계발전의 시금석으로 평가됨.
 - 군 당국 간의 핫라인은 혹시 모를 우발적 무력충돌을 방지하는 역할로, 한국과 중국이 각자 선포한 방공식별구역(ADIZ)은 이어도 상공 등에서 겹쳐 양국 공중 전력 간 우발 충돌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음.
 - 우리 정부는 한중 국방부 간에 핫라인을 설치해 운용하면 북한 문제와 한반도 안정 등에 대해 중국군 수뇌부와 신속하고 긴밀한 의사소통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中, '마약밀반출 혐의' 한국인 2명 추가 보석허가 (02/04, 연합뉴스)**
 - 중국이 마약 밀반출 혐의로 지난해 말 구속한 우리 국민 14명 가운데 12명의 보석을 허가한 데 이어 나머지 2명에 대해서도 보석 결정을 내렸다고 외교부가 4일 밝힘.
 - 외교부 당국자는 "마약 밀반출 혐의로 중국에서 구속된 뒤 조사를 받던 우리 국민 14명 중 12명이 지난달 26일 보석으로 풀려난 이후 나머지 2명도 3일 보석 결정을 받아 석방됐다"고 밝힘.
 - 앞서 중국 광저우, 홍콩 등에 체류하던 우리 국민 14명은 지난해 12월 28일 중국 광저우(廣州) 바이윈(白雲)공항에서 출국하려다 마약 밀수(반출) 혐의로 체포·구속 되었음.

- **"한중일 외교장관회담 내달 서울서 개최" (02/06, 연합뉴스)**
 - 한국과 중국, 일본이 3국 정상회담의 '전초전' 격인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을 내달 하순 서울에서 여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6일 알려졌다.
 -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그동안의 협의 과정을 통해 3국 외교장관 회의 개최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면서 "3월 말 전후로 외교장관 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이에 앞서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이날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의 '전초전' 격인 한중일 3국 외교장관 회담이 내달 하순 서울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이날 보도하였는데, 윤병세 외교부 장관,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이 참석할 이번 회의에서 세 나라는 북핵 6자회담에 대한 대응, '이슬람국가(IS)' 의 일본인 살해 사건을 계기로 한 대테러 대책, 경제 및 에너지 분야 협력방안 등을 논의할 전망이라고 신문은 전하였음.

다. 한·일 관계

- 주미 일본대사 "한일관계 개선, 다른 나라에 묻지말라" (02/04, 연합뉴스)
 - 사사에 겐이치로(佐佐江賢一郎) 주미 일본대사는 3일(현지시간) 워싱턴DC 존스 홉킨스 대학 국제관계대학원(SAIS) 주최로 열린 미·일 관계 세미나에서 한·일 관계개선과 관련해 "한·일 양국이 각자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지, 다른 나라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물어보지 말라"고 주장하였음.
 - 사사에 대사의 이 같은 언급은 2차대전 종전 70주년을 맞아 미국이 일본에 '과거사' 관련 사과와 반성을 담은 입장을 표명하도록 압박하는 것이 한국 정부와 연관돼 있다는 시각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됨.
 - 또한, 사사에 대사는 지난 1998년 양국이 합의한 '21세기를 위한 새로운 파트너십' 으로 되돌아가 관계개선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일본 대학생들 "軍 위안부에 충분히 배상했다" (02/04, 연합뉴스)
 - 일본 대학생들은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자국 정부가 충분히 배상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한국 홍보 전문가인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 연구팀과 대한민국 홍보 연합 동아리 '생존경쟁'팀은 한·일 수교 50년을 맞아 지난달 13일부터 열흘 동안 양국 대학생 각 250명을 대상으로 서울과 도쿄의 중심 거리에서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한 설문 조사를 했음.
 - 조사팀은 양국 대학생에게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일본의 대학생들은 "일본 정부는 이미 충분히 배상" (37.6%)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는 언급을 원치 않는다"(30.0%)고

응답한 반면, 한국 대학생의 94.4%는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배상이 필요하다"고 응답 하였음.

- 이들은 또 '일본의 관헌이 위안부를 강제연행했다는 증거가 없다', '아사히 신문이 뒤늦게 취소한 고 요시다 세이지 씨 관련 기사는 일본군이 위안부를 조직적으로 강제 연행했다는 잘못된 인식을 국제사회에 퍼뜨렸다'는 주장 등을 소장에 담음.

■ 日정부지문회의 "올해 독도영유권 홍보 강화방안 제언" (02/04, 연합뉴스)

- 일본 정부기관인 내각관방 영토·주권대책 기획조정실은 일본인들이 과거 독도에서 어업 활동을 했다는 내용을 담은 그림책을 소개하는 형식의 17분짜리 동영상을 지난달 24일 동영상 공유사이트 유튜브에 올린 것으로 파악되었음.
- '메치(일본산 강치)가 있던 섬'이라는 제목의 그림책 저자인 전직 초등학교 교사 스기하라 유미코(杉原由美子)씨가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책 내용을 설명하는 형식의 이 동영상은 학교 등 교육현장에서 활용토록 하기 위해 제작되었음.
- 일본 정부가 영토 및 주권 관련 대외홍보 방안을 자문하는 전문가 간담회는 3일 야마타니 에리코(山谷えり子) 국가공안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한국·중국이 영토 및 역사인식과 관련해 목소리를 높이는 점 등을 감안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NHK는 전했다.

■ 아베, 일본 전쟁책임 부정하나...물타기 답변·동문서답 (02/05, 연합뉴스)

- 전후 70년 담화 발표를 앞두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역사 인식에 대한 우려가 고조하는 가운데 아베 총리가 국회에서 일본의 전쟁 책임을 회색하는 듯한 태도를 보임.
- 아베 총리는 4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호소노 고시(細野豪志) 민주당 의원 으로부터 전쟁에 관해 일본이 '국책(國策, 국가의 정책)을 그르쳤다'는 것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을 받았는데, 이는 무라야마(村山)담화에 등장하는 표현으로 일본이 전쟁을 일으킨 것이 잘못된 일이었다는 평가를 담고 있음.
- 이에 아베 총리는 "패전의 결과 많은 목숨이 희생됐고, 국토가 초토화되어 많은 분이 도탄(塗炭)의 괴로움을 겪은 것이 사실이며, 당연히 그런 결과를 낳은 일본 정치 지도자에게는 큰 책임이 있다"며 이를 인정하는 것처럼 발언했으나 곧이어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각자의 판단이라는 것이 있고, 일본만이 아니라

세계를 부감(俯瞰, 높은 곳에서 내려다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상대성을 강조하였음.

- 일본당국자 "군위안부 문제 해결, 정치적 의지 필요" (02/05, 연합뉴스)
 - 일본 정부의 한 당국자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의 정치 지도자가 결단해야 한다는 뜻을 밝힘.
 - 이 당국자는 5일 도쿄에서 한국 언론사 특파원과 만나 양국 간에 현재 진행 중인 국장급 협의로는 "열심히 걸어도 정상에 도착하지 못할 수 있다"며 "정치적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하였음.
 - 또 "일본은 총리제이지만 한국은 대통령제라서 대통령 의향이 중요하다"며 "한국과 일본이 함께 다뤄야 할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환경과 방향을 수뇌(首腦)가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국장이 아무리 만나더라도 가능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함.

- '박대통령 명예훼손' 산케이 前지국장 출금 취소 소송 (02/06, 연합뉴스)
 -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한국에서 형사 재판을 받는 가토 다쓰야(加藤達也) 산케이(産經)신문 전 서울지국장이 출국 정지 처분을 풀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교도통신이 6일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가토 전 지국장은 이날 자신에 대한 출국 정지를 취소하라고 요구하는 행정소송과 같은 취지의 집행정지 신청을 황교안 한국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함.
 - 가토 전 지국장은 자신이 무제한으로 출국이 제한될 만큼 중대한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증거를 없애거나 달아날 우려가 없으며 출국정지 처분을 반복해 연장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주장함.

- "일본 정부, '다케시마 날' 행사에 올해도 정무관 파견" (02/08, 연합뉴스)
 - 일본 정부는 시마네(島根)현 주최로 오는 22일 개최되는 '다케시마(竹島·독도 일본명)의 날' 기념식에 마쓰모토 요헤이(松本洋平) 내각부 정무관(해양정책·영토 문제 담당·차관급)을 파견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정 중이라고 산케이(産經)신문이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미조구치 켄베에(溝口善兵衛) 시마네(島根)현 지사가 작년 11월

다케시마의 날 기념식을 일본 정부 행사로 격상시킬 것을 요구했지만, 내달 하순 한중일 외무장관 회의 개최가 검토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종전대로 정무관 파견을 조정 중인 것으로 알려짐.

- 이와 관련, 아베 정부는 매년 2월 22일 개최되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2년 연속 정무관을 파견하였음.

■ 일본국민 44% "아베담화에 침략사죄 표현 담아야" (02/08, 연합뉴스)

- 일본 요미우리(讀賣)신문은 6~7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올여름 발표할 '전후70년 담화'에 과거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대한 반성과 사죄 표현에 대한 찬반의견을 조사하였음.
- 조사결과, "써야 한다"는 응답이 44%에 달하였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대답은 34%에 그침.
- 한편, 현재 아베 내각 지지율은 58%로, 지난 1월 9~11일 실시된 조사의 53%에 비해 5% 포인트 상승하였음.

라. 한·러 관계

■ 윤병세 "러 전승기념행사 참석 여부 마지막 단계서 판단" (02/08, 연합뉴스)

- 뮌헨안보회의 참석차 독일을 방문 중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7일(현지시간) 러시아가 오는 5월 70주년 전승 기념일 행사에 박근혜 대통령의 참석을 초청한 데 대해 "딱 찬 외교 일정과 국제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마지막 단계에서 참석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함.
- 윤 장관은 이날 연합뉴스 등 일부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행사 참석 여부도 불명료할 뿐 아니라 "(박 대통령의 참석 여부는) 그것과는 별개 문제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힘.

마. 미·중 관계

■ 중국, '달라이라마-오바마 회동' 가능성 경계 (02/02, 연합뉴스)

-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는 2일 미 시사주간

타임 등을 인용, 달라이 라마가 이달 5일 열리는 미국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해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하였음.

- 환구시보는 특히 홍콩언론 등을 인용, "오바마는 2008년 이래 백악관에서 달라이 라마를 세 번 만났고 그때마다 중국정부는 강력히 반발했다"며 "오바마와 달라이 라마의 이번 만남은 (역시) 중국의 분노를 야기할 수 있다"고 전했다.
- 중국정부는 지난해 2월 오바마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달라이 라마와 면담할 계획을 밝혔을 때에도 "미중 관계를 엄중하게 훼손할 것"이라며 강력히 비난하고 미국 정부에 항의를 제기한 바 있음.

■ 중국 "사드 배치, 신중해야" 또 지적 (02/05, 연합뉴스)

- 홍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한 중국의 입장을 요구받자 "우리는 관련국이 지역의 평화 안정, 양자관계의 대국적인 측면에서 출발해 관련 문제를 신중하고 적절하게 처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홍 대변인은 "미사일방어(MD)에 관한 중국의 입장은 명확하다"면서 "어떤 국가가 자신의 안보를 추구할 때 반드시 다른 나라의 안보와 지역의 평화, 안전, 안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하였음.
- 이와 관련, 시진핑 주석도 지난해 7월 서울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과의 한중 정상 회담에서 미사일방어 체계 문제를 직접 거론하며 신중하게 처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지난해 7월 양국 정상의 회담 후에 공개한 발표문에서 MD 문제는 거론하지 않았음.

■ 미국 기업들, 정부에 중국 사이버보안정책 대책 요구 (02/06, 연합뉴스)

- 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국 주요 언론에 따르면, 미국 상공 회의소(USCC), 미국 전국제조업체연합회(NAM) 등 17개 기업 로비단체들은 지난 4일 존 케리 국무부 장관과 마이클 프로먼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미국 정부의 고위 관리들에게 중국 정부의 사이버보안 정책이 기업 활동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미국 정부에 대책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음.
- 이 단체들은 중국 정부가 새로 만들려는 사이버보안 법규들이 미국 기업들의 해외 사업 기회와 미국의 일자리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이를 뒤집을 수 있도록

- 미국 정부가 도움을 달라고 요청함.
- 현재 중국 정부는 중국 은행에 납품을 하는 ICT 사업체들이 비밀 소스 코드를 넘기고 중국이 정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 내용을 포함한 새로운 사이버 보안 법규를 제정해 시행하려고 추진 중인데, 이런 정책이 현실화될 경우 미국의 ICT 기업들에 "상당한 부정적 충격"이 있을 것이라고 이 단체들은 주장하였음.

바. 미·일 관계

- 일본 요미우리 "美교과서 군위안부 기술 사실무시" (02/04, 연합뉴스)
 - 일본에서 발행부수가 가장 많은 요미우리신문이 4일자 사설을 통해 미국 교과서의 군위안부 기술을 비판하고 고노(河野) 담화 수정 필요성을 주장하였음.
 - 요미우리 사설은 미국 맥그로힐 출판사의 고교 세계사 교과서가 '일본군이 최대 20만 명에 달하는 14~20세의 여성을 위안부로 강제 모집·징용했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데 대해 "사실(史實)을 무시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 또한, "일본 정부의 조사에서 군에 의한 강제연행을 입증하는 문서는 발견되지 않았고, 고노담화에 강제연행이 있었다는 듯한 표현이 사용됐다"며 "고노담화의 수정은 어쨌든 불가피하다"고 언급함.
- '아베 역사왜곡'에 미국 사학자들 뿔났다...집단성명 파장 (02/05, 연합뉴스)
 - 미국역사협회(AHA) 소속 학자 19명은 5일(현지시간) 아베 정권의 과거사 왜곡시도 에 대해 역사학도의 관점에서 통렬히 비판하는 집단성명을 발표함.
 - 미국의 대학에서 역사학을 가르치는 교수들이 이처럼 특정 이슈를 놓고 집단성명을 발표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로, 성명의 내용으로 "우리는 최근 일본 정부가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성 착취의 야만적 시스템 하에서 고통을 겪은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일본과 다른 국가의 역사교과서 기술을 억압하려는 최근의 시도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밝힘.
 - 성명에서는 특히 아베 총리가 미국 맥그로힐 출판사의 역사교과서를 거론하며 위안부 관련 기술이 잘못됐다고 지적한 데 대해 "우리는 출판사를 지지하고

'어떤 정부도 역사를 검열할 권리가 없다'는 허버트 지글러 하와이대 교수의 견해에 동의한다"고 강조함.

사. 미·러 관계

- 바이든 "러시아 대항해 미국·유럽 협력해야" (02/06, 연합뉴스)
 - 벨기에 브뤼셀의 유럽연합(EU) 본부를 방문한 바이든 부통령은 도널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회담한 후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미국과 EU 간 협력 필요성을 역설함.
 - 바이든 부통령은 "러시아가 유럽의 지도를 다시 그리도록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평화 노력들을 짓밟고 있다"고 비난함.
 - 바이든 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급을 둘러싸고 서방 국가 간 이견이 노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합의를 촉구한 것으로 풀이됨.

- 러 외무 "우크라 사태, 무력으로 해결 못 해" (02/07, 연합뉴스)
 -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한 평화협상을 지속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고 타스 통신 등이 보도함.
 - 뮌헨안보회의에 참석한 라브로프 장관은 이날 "전쟁으로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며 "평화협상이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합의점에 도달하기 위한 기회는 아직 충분하고, 협상을 통해 당사국간 합의가 이뤄질 때 우크라이나 사태가 진정 해결될 것"이라고 덧붙임.
 - 미국의 제재에 대해서는 "러시아는 보복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과는 좋은 관계를 원한다"고 언급하였고,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반군을 지원하고 있다는 미국의 주장에 대해 "거기에는 러시아군과 전문가가 없다"고 해명하며 "우크라이나인들이 국가적 대화를 통해 사태를 풀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하였음.

아. 중·일 관계

- "일본, 남중국해감시 참가 여부 검토" (02/04, 연합뉴스)
 - 니혼케이자이신문(닛케이)은 4일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자위대 항공기와 함정을 활용해 남중국해에서 경계·감시 활동을 진행하는 문제에 대해 "일본으로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는 앞으로의 과제"라며 검토 의사를 밝혔다고 전함.
 - 일본의 남중국해 감시 참가 검토는 미국의 희망에 입각한 것으로 중국의 해양진출 강화에 미일동맹 차원에서 공동 대응하는 방안의 하나로 풀이되며, 실현 시 일본은 미국의 남중국해를 단독 감시 부담을 덜어주는 의미가 있음.
 - 하지만 닛케이에는 일본이 이미 센카쿠(尖閣, 중국명: 닌오위다오<釣魚島>) 열도가 있는 동중국해 경계·감시 활동만으로도 부담이 상당한 터라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하다고 전망함.

자. 중·러 관계

- 중국·러시아·인도 "신형국제관계 건설 추진이 중요" (02/03, 연합뉴스)
 - 중국, 러시아, 인도가 2일 베이징(北京)에서 제13차 3국 외교장관 회담을 열고 '협력·공영을 핵심으로 하는 신형국제관계 건설'과 '국제관계 민주화와 다극화' 등을 추진해나가기로 합의함.
 -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수슈마 스와라지 인도 외교장관은 전날 회담을 마친 뒤 발표한 공보(공동성명)에서 "3국은 개방, 단결, 상호이해와 신뢰의 정신으로 국제문제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힘.
 - 이번 3국 외교장관 회담은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러시아와 서방 간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3국이 서로 협력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번 회동을 통해 기존 관계를 한층 굳건히 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바임.
- "중러 정상, 2차대전 승전 기념식 상호 참가" (02/06, 연합뉴스)
 -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올해 양국에서 개최하는 제2차 세계대전 승전 70주년 기념식에 상호 참가할 예정이라고 홍콩

대공보(大公報)가 보도함.

- 안드레이 데니소프 주중 러시아 대사는 5일 대공보에 "시 주석이 오는 5월 9일 모스 크바에서 열리는 승전 기념식에 참석할 예정이며, 현재 잠정 확정된 상태"라고 밝힘.
- 또한, 데니소프 대사는 "푸틴 대통령도 중국에서 열리는 승전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9월 중국을 방문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중국, 러시아 양국이 공동으로 승전 기념행사를 하는 것은 각계에 반(反) 파시즘과 국군주의를 각인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함.

차. 일·러 관계

- 아베, '북방영토의 날'에 "북방 4개섬 문제 해결해야" (02/08, 연합뉴스)
 -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7일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어 표기)의 날'을 맞아 이들 섬의 영유권 문제 해결 의지를 밝혔음.
 -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전날 도쿄에서 열린 '북방영토반환요구 전국대회'에 참석해 "북방 4개 섬의 귀속 문제를 해결하고 (러시아와) 평화조약을 체결한다는 기본 방침에 따라 문제의 최종적인 해결을 향해 끈기있게 임한다는 결의"라고 말하였음.
 - 이와 관련, 일본과 러시아는 12일 모스크바에서 작년 1월 이후 1년여 만에 외무 차관급 회의를 열 예정이며 북방영토 문제나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의 러시아 방문 문제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임.

© 국제전략연구센터 제공

Ⅲ. 북한 인권 동향

1. 북한 내부 실상 및 대내외 동향

- 신동혁 이어 박연미… 北 "인권고발 날조" 공세(동아일보, 22)
 - 북한 대외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지난달 29일 '인권모략극의 꼭두각시 박연미'라는 제목의 동영상에 박 씨의 친인척들을 출연시켜 북한 인권 증언으로 조명을 받고 있는 박 씨의 증언을 날조라고 주장했다.
 - 북한은 박 씨의 아버지 박진식 씨의 형을 출연시켜 자신의 동생은 구리를 밀수하다 2003년 교화 10년형을 받았으며 2007년 채장암에 걸려 병보석으로 풀려나 그해 남포에서 숨졌으며, 중국에 건너간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 또한 할리우드 영화를 보았다는 죄로 친구 어머니가 경기장에서 기관총으로 처형되는 장면을 9세 때인 2002년에 목격했다는 박 씨의 주장과 관련해 "경기장에서 처형이 진행되진 않는다"고 반박했음.
 - 북한의 주장과는 별개로 국내 탈북자 사회에서도 박 씨의 증언 중 일부가 과장된 게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는데, 익명을 요구한 한 탈북자는 "미국 영화를 봤다고 해서 총살하는 경우는 없다"고 말했음.

- "북, '주민 달래기' 악질 보안원·검사 검열 실시"(데일리NK, 22)
 - 최근 북한 보안원과 각 지역 검찰소 간부들의 비리와 주민들에 대한 횡포가 심해짐에 따라 이들에 대한 중앙당의 검열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음.
 - 주민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김정은 정권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자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검열이 실시되고 있다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 함경북도 소식통은 "지난달 초 '도(道) 내 검찰소, 보안기관을 대상으로 한 검열을 진행할 데 대한 중앙당지시문'이 하달됐다"면서 "지시문은 각 도당위원회가 '당 검열조'를 조직해 주민들을 상대로 가해진 보안원들의 폭언과 폭행, 뇌물행위를 낱알이 조사할 데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고 전했다.
 - 이번 조사는 도당 조직부가 직접 책임지고 진행하고 있으며, 법관들의 횡포와 비리행위를 지역주민들을 통해 파악·조사 후 처벌하고자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 검찰소 검사들과 보안원들의 횡포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실시되는 것임.
 - 소식통은 "지시문에는 '이 같은 행위들은 당과 대중(군중)을 이탈시키는

반혁명적 행위'로 명시돼 엄격히 처벌할 것을 강조했다"면서도 "하지만 도당 자체 검열인 만큼 안면(인간)관계가 적잖게 작용돼 돈과 힘 있는 자는 모두 빠져나갈 것"이라고 덧붙임.

- 함경북도 다른 소식통은 "이번 검열은 주민들의 높아가는 원성을 조금이라도 무마시키려는 '보여주기 식 검열'이라는 반응과 '폭언, 폭행을 정말 심각한 범죄로 취급한다면 아마 살아남을 보안원이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음.

■ 북 식량부족 전년대비 2.5배 증가(자유아시아방송, 23)

- 식량농업기구(FAO)에서 3일 공개한 '북한의 식량 수요·공급 전망 보고서'는 올해 북한에서 소비될 곡물을 약 549만 톤으로 추정하면서 올해 식량 부족분이 지난해보다 2.5배 늘어난, 41만 톤이 부족해 식량 상황이 다소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음.
- 유엔의 북한 식량보고서는 북한의 지난해 곡물 생산량이 일 년 전보다 0.3% 늘었다며 4년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다고 밝혔으며, 지난해 곡물 생산이 소폭 증가했음에도 식량 상황은 더 나빠졌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음.
- 쌀 생산량이 줄었던 부족분은 200만 톤에서 235만 톤으로 증가한 옥수수 생산량으로 충당하면서 전체적인 작황 규모는 일 년 전과 거의 비슷하다고 식량농업기구는 덧붙였음.

■ '북한 식단, 반세기 전과 달라진 것 없어...열량 부족 심각'(미국의 소리, 23)

-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지난해 말 식량농업기구의 자료를 토대로 22개 나라의 식단 변화를 분석한 결과, 북한의 식단이 한국전쟁 이후인 50년 전과 비교해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 북한은 세계 평균에 비해 열량 섭취가 크게 부족하고 식단도 불균형한 상황인 반면,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가들은 훨씬 잘 먹고 있음.
- 북한 주민들의 1인당 하루 열량 섭취는 2011년 현재 2,103 kcal로, 50년 전인 1961년의 1,878kcal에서 크게 나아지지 않았으며, 식량농업기구(FAO)의 일일 권장량 2,500kcal보다 적고, 세계 평균인 2,870kcal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임.
- 북한 주민들의 식단 역시 불균형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1961년 전체 열량의

약 4분의 3 (71%)을 쌀과 강냉이 등 곡물에서 섭취했으며 이후 50년이 지난 2011년에도 곡물 의존도는 63%에 달했음.

- 북한의 곡물 의존도는 조사대상국들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로, 종교적 이유로 고기를 거의 먹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인도의 57%보다도 훨씬 높은 것임.
- 북한의 식단 변화 추이에서 눈에 띄는 점은 1990년대 중반 이른바 '고난의 행군' 기간을 전후해 고기 소비가 크게 줄었다는 점으로, 1989년에 일인당 하루 141g이었던 고기 섭취가 1997년에는 무려 65%가 줄어든 50g이었고, 2011년에도 67g에 그쳤음.

■ 北, 美영화 '인터뷰' 차단 주력... "반입·유통 총살"(데일리NK, 2.3)

- 북한 당국이 김정은의 암살을 다룬 미국 소니픽처스 영화 '인터뷰'의 자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음.
- 그동안의 남한 영상물 시청에 대해선 선처하지만 향후 최고 지도자를 비방하는 외부 영상물 시청에 대해선 엄벌에 처할 것이라는 내부 강연이 진행되고 있다고 소식통이 알려왔음.
- 함경북도 소식통은 "올해 초부터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금까지 남조선 드라마 등을 본 것은 다 용서해 줄 것,' '지금부터 외부에서 들어온 것은 절대 보지 말 것'이라는 내용으로 강연이 있었다"면서 "특히 미제 영상물을 보는 자에 대해선 한 치의 용서도 없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고 말했음.
-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에는 뇌물을 쥐도 소용없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번에 발각되는 사람은 시청의 경우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지고 반입 및 유통자의 경우에는 총살까지 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음.
- 북한 당국이 캄보디아 외교부에 '인터뷰' 방영 금지를 요청한 사실에서 북한이 영화 인터뷰의 내부 유입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그러나 내부 소식통들은 이 같은 차단·통제 움직임은 실패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는데, 다양한 루트를 통해 남한 영상물들이 유입되는 가운데 이를 북한 당국이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오히려 이번 강연을 통해 북한 주민들이 오히려 미제 영상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향후 이 영상물에 대한 수요가 많아질 것이라고 보았음.

■ 북한, 유엔에 '인권결의 무효화 요구' 서한 보내(연합뉴스, 2.4)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4일 리수용 북한 외무상이 유엔 사무총장과 유엔총회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탈북자 신동혁이 '거짓 증언'을 시인한 것과 관련,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을 무효화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음.
 - 리 외무상은 또 유엔이 '인권소동의 난무장이 된 것'에 대한 사태수습, 유럽연합(EU)·일본 등 북한인권 결의를 발기한 국가들의 사죄를 촉구하며 "인권결의가 철회된다면 우리는 인권분야에서 대화와 협력을 진행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 그는 신동혁의 증언은 수백 명의 증언 중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입장에 대해 "만일 수백명이라는 증언자의 명단을 내놓는다면 우리는 그들의 거짓말을 만천하에 드러낼 준비가 돼 있다"고 주장했다.
- 북한, 유엔인권보고관 비난...“탈북자 증언 까밝힐 것”(연합뉴스, 25)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4일 조선중앙통신과의 문답에서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북한 정권교체 발언에 대해 '최고준엄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난하고 탈북자의 증언을 모두 검증하겠다는 뜻을 밝혔음.
 - 외무성은 "미국이 써준 각본대로 신동혁과 같은 이른바 '증언자'들을 만들어서 여기저기 끌고 다니며 거짓말을 꾸며내 국제사회를 기만, 우롱하고 반공화국 인권결의 조작에 날뛰었다"며 그를 '미국의 하수인'으로 폄하했음.
 - 또한 다루스만 보고관이 만났다는 수백 명 탈북자들의 명단을 당장 공개하라며 "그러면 우리는 그가 만들어낸 모든 험잡꾼 증언자들의 범죄적 정체를 낱알이 까밝힐 것"이라고 밝혔음.
 - 이어 "우리의 최고준엄을 건드리는 데 대하여서는 추호도 용서치 않는다"며 미국 등의 '적대세력'이 벌이는 인권책동에 끝까지 강경대응 하겠다고 덧붙였다.

2. 북한 인권

- 정부 “北 인권침해는 명백…비상식적 주장 말아야”(연합뉴스, 22)
- 정부는 2일 북한의 인권탄압 실상을 고발한 탈북자 신동혁 씨가 자신의 주장에 일부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한 것을 계기로 북한이 유엔 인권결의안 무효를

주장하고 있는데 대해 비상식적이라고 비판했음.

-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는 명백한 사실"이라며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이러한 노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음.
- 임 대변인은 "북한은 동 건(신동혁씨의 오류 인정)을 빌미로 비상식적인 주장을 펼칠 것이 아니라 기존의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방북 초청 등 유엔인권 매커니즘에 협력하기로 한 의사를 표명한 데 따라서 이러한 협력을 구체화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음.
- 또 "(북한은)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근거에 따라서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음.

■ 다루스만 "북 정권 교체돼야 정치범 석방 가능"(연합뉴스, 22)

-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2일(현지시간)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인권과 현 북한 정권은 공존할 수 없으며, 정권이 교체된 뒤에야 수용소에 갇혀 있던 정치범들이 석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음.
- 그는 COI 보고서가 유엔총회 제3위원회를 통과하기 전에 북한 외교관들이 찾아와 "결국 더 강경한 이들이 자신들의 자리를 대체하게 될 것"이라며 보고서 문구 일부의 삭제를 요구했다고 밝히기도 했음.
- COI 보고서의 권고 내용이 중국이나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결국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가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두고 "결국 중국도 어느 단계에 가면 국제사회로부터 공통적으로 제재를 받는 정권과 지속적인 관계를 갖는 데 대해 부담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했음.

■ 영 '북 장애인 차별과 성폭력' 문제 제기(자유아시아방송, 22)

- 영국 외무부의 휴고 스와이어 부장관은 최근 영국 정부가 북한의 당·정·군에 만연한 성 폭력 문제 등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보고서가 지적한 인권 유린에 대해 평양 주재 영국대사관이나 영국 런던의 북한대사관 등을 통해 개선을 촉구했다고 밝혔음.
- 이는 북한 여성에 대한 성 폭력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영국 정부의 조치를 묻는 영국 의회 내 초당적 모임인 '북한에 관한 상하원 공동위원회' 제프리 클리프턴-브라운 부위원장의 서면 질의에 대한 응답임.

- 스와이어 부장관은 그러면서 북한은 아직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세부 내용에 대해 영국 정부와 논의하려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 영국 국제개발부의 데스몬드 스웨인 부장관은 중국 내 탈북 여성의 인신매매와 인권 유린 개선을 위한 비 유엔기구에 대한 지원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 스와이어 부장관은 또한 북한의 장애인 차별 정책에 대한 영국 정부의 입장을 묻는 피오나 브루스 하원의원의 질문에 대해 북한 당국이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증진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답했음.
 - 영국에 난민 지위를 신청한 탈북자에 대해 난민 심사에서 북한에 두고 온 가족의 안전을 고려하는 지에 대한 데이빗 엘튼 상원의원의 질문에 난민 심사에서 탈북자의 북한 내 가족의 안전 문제까지 고려하지는 않고 있다고 응답함.
- 충주시·증평군 의회, '북한인권법 제정' 건의안 채택(연합뉴스, 23)
- 증평군의회는 3일 제100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어 '북한인권법 제정 건의안'을 채택했음.
 - 군의회는 건의안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침해가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인데도 북한 인권법이 10년째 국회에 계류만 돼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이 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음.
 - 충주시의회도 3일 열린 제19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같은 내용의 건의안을 채택하고, "인권이란 인간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임에도 북한은 체제 유지를 위해 이런 최소한의 권리마저 탄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이들 의회는 이 건의안을 국회와 외교부, 통일부, 국가인권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 탈북 박연미 씨 반박 "북한 동영상은 허위"(미국의 소리, 24)
-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최근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 TV'에 내보낸 '인권모략극의 꼭두각시 박연미'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통해 탈북 여대생 박연미 씨의 증언을 허위라고 주장했으며, 이에 대해 박 씨는 북한 전문매체인 '뉴포커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동영상의 내용을 반박했음.
 - '우리민족끼리 TV' 동영상은 박 씨의 큰아버지를 등장시켜, 동생이 중국에 간 일이 없고 구리를 밀수하다 발각돼 2003년 10년 교화형을 받은 뒤 2007년

병보석으로 풀려나 북한의 남포에서 숨졌다고 주장했다.

- 박 씨는 자신의 아버지가 2007년 10월 탈북했고 중국에서 찍은 가족사진도 있으며 중국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해 현재 중국에 묘지가 있으며, 이를 입증해줄 수 있는 중국에서 박 씨 가족과 함께 살았던 탈북자들도 한국에 10여 명이나 있다고 밝힘.
 - 또한 필요하다면 아버지의 묘지를 외신기자들과 함께 방문하고 북한 측의 날조를 증명하기 위해 아버지의 유골과 유전자 검사도 신청하겠다고 말했음.
 - '우리민족끼리 TV'의 동영상은 박 씨가 경기장에서 진행된 공개처형을 봤다고 주장했지만 처형이 경기장에서는 진행되지 않는다면 박 씨의 증언에 오류가 있다고 비난했음.
 - 박 씨는 공개처형과 관련해 단 한 번도 '혜산경기장'에서 공개처형을 봤다고 말한 적이 없고 혜산 연풍시장이나 시장 근처에서 공개처형이 있었다고는 말했다고 반박했음.
- 유엔 중국대사 "안보리, 북한 인권 논의할 장소 아냐"(미국의 소리, 25)
 - 중국의 류제이 유엔주재 대사는 3일, 2월 안보리 의장 자격으로 연 기자회견에서 이달 중 안보리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밝힘.
 - 류 대사는 인권 문제는 안보리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며, 유엔에는 인권 문제를 다룰 다른 기구들이 있기 때문에 안보리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데 반대한다는 중국 정부의 입장을 거듭 확인했음.
 - 이어 안보리가 특정 사안을 다룰 경우 상황 진전과 문제 해결에 기여해야 한다고 하며, 하지만 북한인권 문제는 이런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미국 동부지역 대학생들 프린스턴대서 북한인권세미나(연합뉴스, 28)
 - 미국 동부 10여 개 대학에서 활동하는 북한 인권 학생단체들이 7일(현지시간) 뉴저지 주 프린스턴 대학에서 세미나를 열고 북한 인권 개선 방안을 모색했음.
 -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INK)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기초발제에 나서 "북한의 인권 문제는 핵·미사일 문제로 종종 밀렸으나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의 보고서를 계기로 높은 관심을 끌게 됐다"며 "북한의 인권 상황을 다루는 것이 이제는 우선 과제가 됐다"고 말했음.
 - 그는 북한이 지금까지 국제사회의 인권 개선 권고를 무시해왔다면서 "그러나

- 북한 정부도 이제 유엔에서 인권 문제를 언급하거나, 탈북자에 대한 인신공격을 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 문제에 반응하고 있다"고 지적했음.
- 이 자리에는 1997년 탈북한 이현서 씨가 참석해 자신의 탈북 계기와 과정, 탈북 후 한국에서의 어려움, 남북한의 문화적 이질감에 대해 주로 언급했음.
 - 이 씨는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한국 사회에서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자, 최근 몇 년간 한국 사회의 변화로 탈북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면서 차별이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나아진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음.

3. 탈북자

- "북, 국경지역서 탈북자 가족 사살"(자유아시아방송, 23)
 - 회령 출신 탈북자 배 모씨가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최근 일가족 네 명이 중국과의 국경 지역에서 사살되는 등 북한과 중국의 삼엄한 탈북자 단속이 계속되고 있음.
 - 한 부부와 초등학교 2~3학년으로 보이는 아이 등 일가족 네 명이 탈북하다 사살됐다는 걸 두만강 연선 잠복초소에서 근무하던 국경수비대원으로부터 자신의 지인이 직접 들었다고 배 씨는 말했음.
 - 그는 국경수비대, 보위부, 보안서, 노동적위대까지 동원돼 국경 경비가 삼엄한데다 중국은 강제북송의 대가로 북한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음.
 - 배 씨는 회령시 보위부에서 강제북송된 탈북자 한 명 당 엄청난 양의 낙지를 중국 변방부대에 보내기로 약정한 서류를 직접 본 기억도 있다며 중국 당국이 단지 '경제적 불법월경자'이기 때문에 정책에 따라 탈북자를 북한으로 송환하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톡톡히 챙기고 있다고 밝혔음.
- 앰네스티, '탈북 과정' 동영상 발표(자유아시아방송, 25)
 - 국제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가 영국에서 북한 인권 운동을 하는 탈북자 박지현 씨가 직접 경험한 강제북송과 인신매매 등 탈북 과정을 담은 동영상을 유튜브와 앰네스티 웹사이트 등을 통해 6일 공개할 예정임.

- 이 단체 영국 지부의 케리 모스코지우리(Kerry Moscojiuri) 캠페인국장은 5일 수 개월 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The Other Interview' 즉 '또 다른 인터뷰'라는 동영상 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 박 씨는 함경북도 청진 출신으로 인신매매, 강제복송 등 탈북 과정에 겪은 고통스러운 경험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있음.
 - 모스코지우리 국장은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보고서가 발간되고 유엔 인권이사회, 총회,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인권의 심각성에 주목했지만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여전히 저조하다고 지적했음.
- 남한생활 적응 못하고 재입북한 탈북자 구속(강원일보, 25)
 - 강원지방경찰청은 탈북 이후 도내에 정착해 살다가 적응하지 못해 북한을 드나든 혐의로 30대 A씨를 4일 구속했음.
 -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초 중국으로 건너가 북한 양강도 보위부 요원의 안내로 압록강을 건너 밀입북한 후 보위부 요원과 만난 혐의를 받고 있음.
 - 경찰은 A씨가 회합 중 탈북민의 신상정보 등을 북에 제공했는지 여부도 확인중임.
 - 조사 결과 10여 년 전 탈북 이후 도내 영동지역에 정착한 A씨는 적응에 실패하면서 2013년에도 중국의 북한 영사관을 통해 입북을 시도한 바 있음.
 - 지난해 입북에 성공한 A씨는 북한생활에 다시 염증을 느껴 재입북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다시 탈북한 후 지난달 14일 국내로 입국하던 중 공항에서 경찰에 검거됐음.

4. 이산가족

- 특이 동향 없음

5. 납북자

- 일본 납북피해 가족들, 조속한 문제 해결 촉구(미국의 소리, 23)
 - '북한에 의한 납치 피해자가족 연락회'는 1일 납북자의 조속한 귀환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음.

- 연락회의 이즈카 시게오 대표는 집회에서 북한이 진행 중인 납치 문제 재조사에 진전이 없는데 대해 좌절감을 표하고, 피해자 가족들이 문제 해결의 징후를 볼 수 있도록 정부가 마감시한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요코타 메구미 씨의 아버지 요코타 시게루 씨는 북한의 특별조사위원회가 지난해 9월 말쯤 조사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자체적으로 정한 마감시한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하면서 일본 정부가 이같은 교착 상태를 끝내야 한다고 지적함.

6. 국군포로

- 특이동향 없음

7. 대북지원

- FAO, 올해 대북지원 427만 달러(자유아시아방송, 25)
 - 식량농업기구(FAO)는 북한의 농업 관련 시설 개선과 기술 전수 등 427만 달러의 예산으로 3건의 시서러 지원과 5건의 기술 협력 등 모두 8건의 대북지원사업을 통해 북한의 농업 환경을 개선하고 정보 체계를 강화하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밝힘.
 - FAO의 피에로 콘포르티 분석관은 북한의 식량 부족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음.
 - 북한에서 진행 중인 8건의 지원사업은 기술협력, 신용기금, 자원지원, 원격식량지원(Tele Food), 타 국제기구와의 연계 사업 등으로 나뉨.
 - 3건의 긴급회복사업은 감자저장 관리, 그리고 겨울철 농사를 위한 온실과 비닐덮개 등 장비와 기술을 주로 지원하며, 스웨덴 정부와 유럽연합이 조성한 '식량안보협력기금' 225만 달러가 투입됨.
 - 5건의 기술협력사업은 지난해부터 진행 중인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한 통제능력강화와 조류독감 예방을 비롯해 삼림자원보호를 위한 시설물과 농작물보관실 개선 등으로 202만 달러의 예산이 배정됐음.

- 30만 달러의 예산으로 진행 중인 '쌀 강화 체계' 사업은 지난해에 시작되어 올해 말까지 진행되며, 구제역 확산을 막는 지원 사업에도 43만5천 달러가 지원됨.
 - 또한 약 47만 달러의 예산으로 내년까지 농작물보관실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조류독감 통제를 위한 긴급지원금 40만 달러가 지난해와 올해로 나뉘어 집행될 예정임.
- WFP, 1월 대북 식량 지원 지난해 대비 27% 감소(미국의 소리, 25)
 - 세계식량계획(WFP)의 1월 대북 영양 지원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실케 버 대변인은 지난달 북한 영유아와 임산부, 수유모 등 66만 4천여 명에게 1천731t의 영양강화식품을 분배했다고 밝혔음.
 -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69만5천여 명에게 2천 385t을 지원한 것과 비교하면 27%, 전 달인 지난해 12월 1백만여 명에게 2천916t의 영양 지원을 했던 것에 비해서는 무려 41% 감소한 규모임.
 - 실케 버 대변인은 지난달 수혜자 수가 감소한 이유에 대해 북한의 학교와 유치원이 방학 중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또한 자금 부족과 영양강화식품 재료의 도착 지연 등으로 영양강화식품 분배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며, 2월에도 지원 목표인 180만 명에게 영양 지원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힘.
 - 미 북한인권특사 "대북 식량·의약품 지원 여전히 시급"(미국의 소리, 26)
 - 로버트 킹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4일 존스홉킨스 대학 국제대학원이 주최한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에 대한 식량과 의약품 지원이 여전히 시급하며 이런 점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에 비정부 기구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음.
 - 킹 특사는 북한이 2011년 이후 미국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으며 미국 정부도 대북지원을 하지 않았으나, 북한이 인도적 지원을 필요로 하지 않은 상황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 그리고 비정부 기구들의 대북지원 같은 인도적 지원을 통한 개인과 개인 간의 접촉이 주는 혜택이 크다고 하며, 미국 정부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원조를 제공하는 비정부기구들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힘.

- 미 '피드 더 칠드런', 대북 지원 시작...57만5천명 분 식사 지원(미국의 소리, 26)
 - 미국의 구호단체인 '피드 더 칠드런'이 지난해부터 대북 지원을 시작해 북한에 상주사무소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시범사업으로 북한의 고아들에게 57만 5천 명 분의 식사를 전달했음.
 - 이 단체에서 신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코리 고든 씨는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지난해 북한에 컨테이너 4개 분량의 식량을 보냈다고 밝혔음.
 - 피드 더 칠드런이 전달한 식사는 '바이타밀'(Vitameal)로 불리는 영양강화 식품으로 콩과 보리, 쌀을 섞은 것이며, 바이타밀 컨테이너 하나 분량의 가격은 미화 5천 달러로에 해당함.
 - 고든 씨는 지난해 7월 지원품 분배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북한의 9개 고아원을 방문했으며, 당시 고아원 관계자들과 의사들, 정부 당국자들 모두가 단백질과 영양소가 강화된 바이타밀의 효용성을 높이 평가했다고 말했음.
 - 향후 북한의 고아원들과 외곽 지역의 학교들을 지원하고, 이어 영양강화식품과 비타민 A, 구충제, 그리고 의료 지원과 농업 지원도 구상하고 있다고 함.
 - 고든 씨는 특히 피드 더 칠드런이 북한에 상주사무소를 둘 계획이라며, 북한 측에 제시한 약정서에 지원품의 분배감시를 위한 사무소 설치를 명시했다고 밝혔음.

8. 북한동향

- 北,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 편승한 새누리당이 국회에서 '북 인권법'을 단독으로라도 처리하려고 새해 벽두부터 분주탕을 피우고 있다'고 비난(2.1,중앙방송)
- '美 경찰, 흑인사진 과녁 사격연습을 거론 '미국은 인간세계의 윤리와 도덕이 아니라 비인간적인 악폐와 강도의 논리가 판을 치는 사람 못살 인간생지옥, 인권유린의 난무장'이라고 비난(2.1,중앙통신·민주조선)
- 北 리수용 외무상, 2월 2일 탈북자 신동혁의 거짓증언 인정 사건과 관련하여 '유엔의 對北 인권결의 무효화 조치, 對北 인권결의 발기자들의 국제사회에 사죄' 등 유엔 사무총장과

유엔 총회 의장이 해당조치를 취해줄 것 요구 '편지' 전달(2.4,중앙통신)

- 국제인권단체들과 국가들이 '북한의 美 CIA 고문만행을 유엔 인권이사회(3월) 안건상정 제안에 공감을 표시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는 "미국이 대국의 강권과 전횡을 부리고 있지만 국제적 정의와 인류의 양심을 절대로 말살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2.3,중앙통신·민주조선)
- * 영국 등 일부 유럽 국가들이 '美 CIA 고문만행에 가담한 책임있는 자들을 형사처벌할 데 대한 세계 민심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며 '사죄와 즉시처벌'을 주장(2.3,평양방송/국제사회의 충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 【北외무성 대변인, 중통기자와 문답】 '마르주키 다루스만'(유엔 北인권특별보고관)의 '北 정권교체' 발언 관련 '미국 등 적대세력들이 다루스만과 같은 너절한 자들을 내세워 벌리는 광란적인 인권소동에 끝까지 맞서 강경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2.4,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사 논평】 신동혁의 증언 번복 관련 '미국이 국제무대들에서 벌려온 '北인권' 소동이 공화국의 존엄과 자주권을 침해한 불법무법의 날강도적 행위였다고 비난하며 재차 '유엔의 北인권결의안 무효' 주장(2.4,중앙통신/유엔의 대조선 인권결의는 마땅히 무효화되어야 한다)

© 북한인권연구센터 제공